

제4회 국회외교안보포럼
Korean Consensus

새 정부의 한일관계: 비전과 전략

2025. 7. 23. 수

10:00 ~ 12:00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PRO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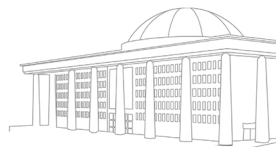


제4회 국회외교안보포럼 - 새 정부의 한일관계: 비전과 전략

- 일 시 : 2025.7.23.(수) 10:00~12: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 주 최 : 국회외교안보포럼
- 주 관 : 국회미래연구원
- 일정표

시간	내 용	주 체
10:00~10:20 (20분)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자
	개회사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
	축사	주호영 국회부의장 김석기 국회외교통일위원장 민홍철 한일의원연맹 간사장 겸 부회장
10:20~10:25 (5분)	사진 촬영 및 장내 정리	참석자
10:25~11:05 (40분)	발제 1-1 새 정부의 대일외교 : 한일관계 대전환의 과제와 전략	남기정 서울대학교 교수
	발제 1-2 신정부 대일외교의 과제 및 전략 : 지속가능한 한일관계의 기반 구축 방안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
	발제 2 한일 경제관계, 새로운 협력 모델의 탐색	이창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11:05~11:55 (50분)	토 론 좌장 김현철 서울대학교 교수 토론 이성권 국회의원(국민의힘) 이재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세정 중앙일보 논설위원 길윤형 한겨레 논설위원 강철구 배재대학교 교수	좌장 및 패널
11:55~12:00 (5분)	폐회	

CONTENTS



제4회 국회외교안보포럼 - 새 정부의 한일관계: 비전과 전략

개회사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	3
--------------------	---

축사

주호영 국회부의장	7
김석기 국회외교통일위원장	9
민홍철 한일의원연맹 간사장 겸 부회장	11

발제

발 제 1 ① 새 정부의 대일외교: 한일관계 대전환의 과제와 전략	
남기정 서울대학교 교수	13
② 신정부 대일외교의 과제 및 전략: 지속가능한 한일관계의 기반 구축 방안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	29
발 제 2 한일 경제관계, 새로운 협력 모델의 탐색	
이창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37

토론

이성권 국민의힘 국회의원	61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67
장세정 중앙일보 논설위원	69
길윤형 한겨레 논설위원	71
강철구 배재대학교 교수	77



제4회 국회외교안보포럼 - 새 정부의 한일관계: 비전과 전략



개회사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

개회사



김 기 식
국회미래연구원장

2025년은 광복 80주년, 한일관계 60주년의 해입니다.

한국에서는 6월 이재명 정부가 임기를 시작했고, 최근 참의원 선거 이후 일본 이시바 내각도 재편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국회외교안보포럼 제4회 포럼은 급변하는 국제환경 하에서 역내 안보, 경제 질서에서 그 중요성이 한층 강화된 한일관계의 외교안보, 경제협력 현안과 중장기 미래비전을 아우르는 초당적 대화의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새 정부의 한일관계: 비전과 전략〉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에서는 한일관계의 역사, 외교안보, 경제협력과 관련해 한국의 학술, 정책 담론을 선도해온 전문가들인 남기정 서울대 교수,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 이창민 한국외국어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습니다.

특히 정책결정 일선에서 활동해오신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주셨고, 한일의원연맹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오신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성권 국민의힘 국회의원, 그리고 장세정 중앙일보 논설위원, 길윤형 한겨레 논설위원, 강철구 배재대 교수가 토론에 나서, 새 정부의 한일관계 미래 전략과 관련된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포럼을 계기로, 한일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만들어가는 토대가 구축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7월 23일

국회미래연구원장 김 기 식



제4회 국회외교안보포럼 - 새 정부의 한일관계: 비전과 전략



축사

주호영 국회부의장

김석기 국회외교통일위원장

민홍철 한일의원연맹 간사장 겸 부회장

축사

주 호 영
국회부의장



안녕하십니까, 국회부의장 주호영입니다.

국회외교안보포럼에 함께 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는 “새 정부의 한일관계: 비전과 전략”입니다. 남기정 교수님, 조양현 교수님, 이창민 교수님께서 그동안 한일관계 연구와 정책 실천에 쌓아오신 깊이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발제를 맡아 주셨습니다. 한일의원연맹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이성권 의원님,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오신 이재정 의원님, 그리고 장세정 동아일보 논설위원님, 김윤형 한겨레 논설위원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정파와 기관을 넘어서는 건설적 논의의 장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지금 국제질서는 그 어느 때보다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환기에 한국의 외교안보 전략과 경제협력의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국회는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국회외교안보포럼: Korean Consensus」를 출범시켰습니다. 대한민국 외교안보 정책 거버넌스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제4회 포럼은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의 글로벌 질서 변화와, 최근 참의원 선거를 치른 일본의 정치 지형 변화 속에서 한국이 마주할 현안과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제질서의 격변기에는 과거의 관행이나 방식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외교안보뿐만 아니라 경제통상,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새로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오늘 포럼이 한일관계의 중장기 발전을 위해 외교, 안보, 경제협력의 여러 측면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새 정부의 한일관계 전략과 미래 대응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한일 양국이 더 나은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7월 23일
국회의원 주 호 영

축사

김 석 기

국회외교통일위원장



한일관계 정상화 60주년을 맞은 2025년은 과거 한일 기본조약을 맺은 60년 전과는 확연히 다른 국제질서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외교안보환경은 한국 정부가 외교, 안보, 경제통상, 첨단기술 등 다양한 의제와 권역에서 능동적이고 유연한 대응과 중장기 비전에 바탕한 전략적 접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제질서 전환의 시대 안팎으로 창의적 전략이 절실한 지금 외교안보에 대한 초당적 인식을 구축하는, 국회외교안보포럼: Korean Consensus의 발족과 정기 포럼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국회외교안보포럼 4회 포럼은 <새 정부의 한일관계: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현재 변화하는 역내 질서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인 일본과의 미래 비전과 정책 로드맵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참의원 선거 이후 일본의 이시바 내각의 국내정치 환경은 유동적이지만 트럼프 2기 미 행정부가 동맹, 우방국에 대한 요구를 고려할 때 한일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실용적 차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우리보다 먼저 관세 협상을 진행해온 일본 사례에 대한 국내 관심도 큰 것으로 압니다.

안보와 경제 협력 양측에서 새로운 한일관계에 대한 유연하고 능동적인 정책 담론과 실천이 필요한 만큼, 과거의 교훈을 찾는 한편 국내정치적 한계를 넘어 공동 대응 및 협력이 가능한 공간을 발굴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일이 역내 다자 외교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해나가는 것은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가치, 이익을 높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반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포럼에서는 남기정 교수님, 조양현 교수님, 이창민 교수님 등 학계 전문가는 물론 한일의원연맹 이성권 의원님, 외교통일위원회 이재정 의원님, 동아일보 장세정 논설위원, 한겨레 길윤형 논설위원이 함께 참여해 새 정부의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그야말로 초당적, 초기관적 토론의 자리가 기대됩니다.

아무쯁록 새 정부의 한일관계 전략적 대응을 위한 포럼을 기반으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초당적 공동 인식을 생산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7월 23일
국회의원 김 석 기

축사



민 홍 철

한일의원연맹 간사장 겸 부회장

러-우 전쟁, 중동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트럼프 2기 미 행정부 집권과 함께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은 더 없이 커지는 형국입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치경제 환경에 대응해, 새 정부의 외교, 안보, 경제통상, 첨단기술 등 영역과 권역을 넘어서는 다양한 의제, 관계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정책대안의 마련은 그 어느 때보다 민감하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국제질서 대전환기, 창의적인 전략적 대응이 절실한 시기에 정파를 넘어서서 외교안보에 대한 초당적인 공동인식을 건설하고자 발족된, 국회외교안보포럼: Korean Consensus는 그야말로 국회의 포럼으로서 여야는 물론 정부, 학계, 언론을 망라하는 의미있는 대화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회외교안보포럼 4회 포럼은 글로벌, 역내 질서 변화에서 매우 중요한 관계인 한일관계에 대한 새 정부의 대응을 논의하는 뜻깊은 포럼입니다.

한일은 모두 최근 선거 이후 새로운 진용을 갖추고 변화하는 질서에 대비해야 하는 시점에 서 있기도 합니다.

국제질서의 전환은 더 이상 기존의 방식으로 잘 하는 것만이 아닌,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유연하고 중장기 미래지향적인 외교안보 전략과 로드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한일관계: 비전과 전략〉 포럼은 학계의 전문가 분들은 물론 여야 의원님, 언론 필진들이 함께 참여해 새 정부의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외교, 안보, 경제통상, 첨단기술 등 다양한 영역, 권역을 초월하는 심도깊고 초당적 논의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새 정부의 한일관계 전략적 대응을 위한 오늘의 자리를 바탕으로 지속해서 공동 인식을 통해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토대가 구축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7월 23일
국회의원 민 홍 철



제4회 국회외교안보포럼 - 새 정부의 한일관계: 비전과 전략



발제 1-①

새 정부의 대일외교: 한일관계 대전환의 과제와 전략

남기정 서울대학교 교수

새 정부의 대일외교: 한일관계 대전환의 과제와 전략

남기정 서울대학교 교수

1. '포스트 1965년 체제'의 한일관계 구상

(1) 2025년, 한일관계의 행성 대정렬(Planet Parade)

- 한일기본조약(1965)으로부터 60년 = '한일 1965년 체제' 60년
- 패전, 해방, 분단(1945)으로부터 80년 = 분단체제 80년
- 을사늑약(1905)으로부터 120년 = '극동 1905년 체제' 120년
- 운요호사건 (1875)으로부터 150년 = 양절체제 150년

- '역사봉인-경제분업-안보협력'의 한일 1965년 체제는 동아시아에 구축된 3층의 국제질서 위에 구축됨. 그것은 각각 '탈식민-탈패권-탈냉전'의 과제.
- 한국에서 2025년에 새 정부가 탄생했다는 것은 역사적 필연이며, 새 정부는 이에 대한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질 필요.
- 150년의 시간을 단위로 한 거시역사적, 철학적 문제의식에서 마련되어야 하면서도, 현안들에 대한 미시공학적 전략/정책에 대한 구체적 고민으로 풀어야 할 과제.

(2) 윤석열 정부 시기 한일관계

- 윤석열-기시다-바이든의 조합으로 진행되던 '또 다른' 포스트 1965년 체제 구상. 상호군수지원협정(ACSA)과 상호접근협정(RAA)을 내용으로 하는 한일(준)동맹 구상.
- '극동 1905년 체제'의 제도화로서 '포스트 1965년 체제' 구상.

치지와 야스아키의 '극동 1905년 체제'론(千々和泰明, 『戦後日本の安全保障』, 中公新書, 2022), 극동 지역질서를 둘러싼 전전과 전후의 연속성에 주목, '일체화한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이 현실로 존재. 일본이 청일-러일전쟁에 승리하여, 시모노세키조약과 포츠머스조약으로 대만과 조선을 확보한 뒤, 일본, 조선(적어도 그 남부), 대만이 힘에 의해 뒷받침되는 동일 진영에 묶여 있는 극동지역질서가 존재, 이를 '극동 1905년 체제'로 부름.

- 2024년 9월 6일 퇴임을 앞둔 기시다 수상의 방한과 '제3국에서 자국민 대피협력 각서' 체결. 이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 대피협력 각서'로 발전될 가능성을 가짐. 이는 자위대의 한국 파견을 위한 제도 마련의 의미를 지님. 이는 일본이 그동안 호주, 영국, 필리핀 등과 체결한 상호접근협정(RAA)의 전 단계. 이와 동시에 ACSA 체결이 추진될 수 있음. ACSA+RAA는 동맹의 수준에 도달하는 것임.
- 한일ACSA, 한일RAA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연루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며, 북한에 대해서는 극도의 위협이 될 수 있음. 북한의 대응은 더욱 날카로워질 것이며, 한반도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임.
- 이러한 전개가 계엄으로의 전개를 이루던 또 하나의 기류. 계엄 시도가 국민적 저항으로 좌절되었음에도 1965년 체제의 내구성이 관성으로 존재.
- 2025년은 한일관계 대전환의 기회. 그러나 대일외교의 어려움을 인식하는 것이 출발점.

2. '1965년 체제'에 내장된 역사화해/안보협력의 딜레마

(1) 한일기본조약의 한계: 메워지지 않은 해석의 간극

- 한일기본조약 제2조와 제3조의 문제로서, 제2조는 역사갈등의 기원, 제3조는 안보 협력의 기원이 됨.
- 여기에서 한일 역사화해와 한반도 평화구축의 과제가 연계된 구조를 확인.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 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제3조,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연합 총회의 결정 제195호(III)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확인한다”

- 한일기본조약 제2조가 관철되는 한일관계의 현실이 역사갈등을 구조화. 역사갈등 반복의 원인으로서는 한일기본조약 제2조 문제를 더 이상 지나칠 수 없는 상황.
- 메이지산업유산정보센터, 사도광산 전시실 등의 문제로 드러나고 있으며, 일본의 메이지 이후 산업시설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이 이어질 전망. 일본은 메이지 산업유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결정에 즈음해, 일본대표단 발언을 통해, ‘자신의 의사에 반해(against their will)’, ‘강제로 일하게 된(forced to work)’, ‘희생자들(victims)’이 있었음을 인정했음에도, ‘이것이 종래의 입장을 바꾸는 것이 아니며, 위법적인 강제노동이 있었음을 인정한 것이 아님을 확인하고 있음. 반면 한국은 이를 강제노동(forced labor)의 존재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
- 이러한 간극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일 역사갈등의 소재가 될 우려. ‘관리’만으로 ‘관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직시하고, 보다 진전된 해결을 모색할 필요.

(2) 극복을 위한 노력: 절반의 성공인 1998년 체제와 미완의 2010년 체제

- ‘한일공동선언: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파트너십 선언’은 과거직시, 현재확인, 미래지향의 원칙을 확인. 그럼에도 과거의 무엇을 직시할 것인가, 즉 그 책임과 관련한 언급이 없음.
- 포스트-식민지 시대에 양국 국민이 이룩한 민주주의와 평화주의를 위한 노력과 공헌을 상호 평가. 이로부터 1998년 공동선언은 1987년 민주헌법과 1946년 전후헌법의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음. 전후적 가치로서 자유 민주주의(자유민주주의가 아님)와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이념을 공유.
- 장기적 과제로서 과거직시와 미래지향의 변증법적 발전을 상정. 이는 2002년 북일평양선언의 기초가 됨.
- 한일공동성명이 북일공동성명과 함께 만들어낸 하나의 도달점이 간 나오토 담화. 이를 계기로 2010년 체제로의 진입을 시도.

- 간 나오토 담화에서 중요한 부분은 ‘정치적 군사적 배경 하에서’ ‘한국인의 뜻에 반해’ 식민 지배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한 부분. ‘군사적 압력을 수단으로 강제된 조약’은 불법무효의 중요 요건. 또한 간 담화에서 문화재 반환의 의사를 표명한 부분도 주목하고 이를 활용할 필요.
- 이 담화는 민주당 집권 시기의 담화로, 자민당은 아베 담화를 발표해서, 이를 덮어씌움. 간 나오토 담화를 자민당과 민주당이 공유하고, 이를 다시 한일이 공유하는 단계로 높여가는 방법이 현실적인 방법으로 부상할 수 있음. 이때, 민주당 시절 간 담화 작성에 참여한 나가시마 아키히사(長島昭久) 현 수상보좌관의 존재에 주목할 필요.

(3) 2025년에서 2030년으로

- 한일기본조약 60주년인 2025년을 한일기본조약 제2조/제3조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기점으로 삼고, 한일공동선언 30주년인 2028년에 신 한일공동선언을 채택. 한국병합으로부터 120년이 되는 해인 2030년에 위의 두 노력을 엮어서 한일 신조약을 체결.
- 이를 위해서 한국과 일본의 시민 및 정부 사이의 주체적인 노력으로 문제 해결의 기초들이 만들어짐. 즉 1993년 고노 담화, 1995년 무라야마 담화, 1998년 한일공동선언, 2010년 간 담화 등.
- 이와 더불어 국제사회의 인식과 실천의 진전을 확인할 수 있음. 즉 2001년 식민지주의와 노예제에 반대하는 ‘더번 선언’에서 식민지주의가 남긴 피해는 과거를 소급해 책임을 물어야 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된 이후, 구 제국주의 국가들의 배보상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
- 그 중 2008년 이탈리아-리비아 우호조약을 참고할 수 있음. 조약은 전문에서, 이탈리아가 리비아에 대해 식민지 지배에 대해 사죄하고, ‘과거를 둘러싼 분쟁 시기의 청산’이라는 제목의 장을 마련하여 여기에서 투자를 약속. 배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위의 구조가 배상의 성격을 반영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이는 배상에 관한 조약으로 간주됨.

3. 포스트 1965년 체제로의 길

(1) 입구로서 ‘문희상 법안 플러스’

- 강제동원 문제 관련해서 ‘문희상 법안 플러스’를 구상. 이는 과거 ‘기억 화해 미래 재단’의 설립을 구상한 ‘문희상 법안’에 ‘니시마쓰건설(西松建設) 방식’을 결합시키는 것.
- 2007년 4월 니시마쓰건설 소송에 대해 일본 최고재판소는, 중일공동선언에 의거하여 개인청구권은 실제적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재판을 통해 실현할 수 없다는 판단을 제시. 그럼에도, 청구권의 포기는 재판상의 권능을 소멸시킨 데 머무르는 것으로, 최고재판소는 강제노동을 사실을 인정하고, 니시마쓰건설이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할 것이 기대된다고 하여 자발적으로 배상을 실시할 수 있다고 판단.
- 2009년 10월과 2010년 4월, 도쿄 간이재판소에서 화해가 성립, 니시마쓰건설은 강제연행 사실을 인정하여 사죄하고, 2009년엔 2억 5천만 엔, 2010년엔 1억 2천 800만 엔을 중국 민간단체에 신탁하여, 중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보상과 위령비 건설 비용으로 충당.
- 일본 최고재판소가 ‘강제노동 사실’의 존재를 인정, ‘니시마쓰 건설이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할 것이 기대된다’고 권고. 국가 간 조약과는 별도로 ‘가해-피해 사실’이 인정된다면 당사자는 실질적 구제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정부는 이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사례. 이러한 ‘화해’가 중국의 전쟁배상 포기를 전제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한일관계에 적용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으나, 중요한 점은 ‘기업의 책임 이행’이 국가 간 조약의 범위 밖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사실이며, 이는 한일관계에도 적용가능함. 또한 한국의 피해자 및 피해자 지원 시민사회에서도 이러한 해법을 선택지로 제시한 적이 있음.
- 민간 기업을 상대로 한 시민주도의 해결로 정부 간 노력의 한계를 보완한다면, 이는 국가 간 화해보다 진전된 형태.

(2) ‘2015 기자회견문의 재전유(Re-appropriation)’라는 방법

-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요구는 공식사죄와 법적배상.
- 우리 정부의 입장은 2015년 합의가 ‘국가 간 정부 간 합의’로 존재하며 ‘파기나 재협상의 추가 요구’는 하지 않으나, ‘역사적 진실, 보편적 정의, 피해자 입장’에서 문제 해결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
- 문제 해결에 이르는 방법으로, ‘2015년 외교장관 기자회견문의 재전유’를 제안.
- ‘2015년 한일 외교장관 기자회견문’에 입각한 이른바 ‘2015년 합의’는 ‘프로세스에 대한 합의’로, 문제 해결을 위한 로드맵을 공유하고 함께 노력하자는 것이 그 내용. 그 내용에 입각하면, 일본 정부의 성실한 협조가 합의에 따른 해결을 위한 필요조건.
- ‘2015년 합의’에서 확인한 10억 엔은, 고노 담화에서 일본 정부가 인정한 대로 일본군에 의한 전시 여성인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일본 정부가 책임을 지고 사과하는 마음의 징표로서 일본의 예산 조치로 거출’하여 전달하는 ‘배상의 조치’라는 사실을 확인.
- 이를 전제로 일본 정부가 거출한 10억 엔의 잔여금(56억원)과 여가부에 편성한 양성평등기금(103억원)으로 ‘여성인권평화재단(가칭)’을 설립, ‘진상규명과 연구 교육, 기억계승’을 위한 시설을 라키비움의 형태로 설립하여, 국제사회와 미래로 열린 해결의 거점을 마련.
-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정부 간 노력을 확인.

(3) 한일관계 및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국내 여론지형

- 2025년 동아시아연구원 조사,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친밀감 조사에서 2025년에 역전현상이 일어남.
- 2025년 머니투데이-한국갤럽 2025 대일인식 조사(만 18세 이상, 1,008명)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일본과 거의 같거나 선진국이라는 사람이 65%에 이름.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라는 사람은 34%임. 한일관계가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어느 정도 중요하다’는 사람은 모두 거의 90%에 이름. 반면,

일본의 태도 변화 없이 서둘러 관계 개선할 필요없다는 사람도 64%에 이름. 한일관계의 수평화, 대칭화, 일상화를 확인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과거사 관련한 적극적 대일외교에 대한 주문도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음.

(4) 외교적 행위로서 일본 정부의 사죄 표명

- 진실한 사죄에 대한 인식의 공유와 이를 가시화하는 일이 숙제.(화룡점정, 달마 인형의 눈 그리기)
- ‘사실의 진솔한 인정, 반성과 사죄의 직접적인 표현, 원상복구를 위한 법적 구제의 약속, 즉각적인 행동’ 등으로 구성됨.
- 오바마의 히로시마 연설과 아베의 진주만 연설은 모두 ‘책임’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나, 양국 국민은 이를 수용하고 ‘화해’를 이룬 사례. 반면 ‘2015 합의’는 ‘책임’에 대한 언급에도, ‘책임언급의 주체’가 보이지 않음으로서, 한국 국민이 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반발한 사례.



4. 북일국교정상화를 위한 한일협력

(1) 대일외교 상대로서 이시바 내각

- 초당파 의원연맹, '이시바시 탄잔 연구회'의 존재. 2023년 6월 발족, 공동대표에 이와야 다케시 외상(자민당) 등.

- 기시다 내각 하에서 일본은 미국 바이든 정부에 보조를 맞춰, 미국 중심의 대중/대러 포위망에 적극 가담. 그러나 국제질서의 다극화 경향을 의식.
-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 가운데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긴장관계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국가들이 존재. 미국 추종으로 미 패권의 일익을 담당하는 것만으로는 일본의 장래를 위태롭게 한다는 의식이 배경.
- 이시바시 탄잔(石橋湛山)의 소일본주의의 길에 주목하는 포스트 아베 구상.

(2) 이시바 내각과 한반도-일본관계

- 한일관계는 과거사에서 일정한 배려를 표명하면서 안보 면에서 한미일 협력의 관성 위에서 전개될 가능성.
- 자민당 내 보수-우익과 결별 가능성. 그 결과 보수-리버럴로의 회귀가 이루어진다면 오부치 시대가 재현될 수 있음.
- 다만 과거사 인식에서 한계를 보이기도 함. “징용공 문제 해결책에 대해서는 한국 국내에서 큰 비판이 있는 듯. 큰 리스크를 안고 한일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마음에 일본으로서는 성실히 대답해야”
- 또한 한일관계 개선의 모델로, 김-오부치가 아니라 나카소네-전두환을 거론하는 점에서도 안보 면에서 매파의 측면을 보임. 이는 주요 직책에 국방쪽을 포진시킨 점에서도 확인됨.
- 한편 북일관계에서 아베 외교와 다른 새로운 방향을 보임. 출마 기자회견 시, 상호 연락사무소 개설을 공약으로 제시. 북일국교정상화촉진의원연맹 간부 및 위원들과의 긴밀한 관계. 에토 세이시로(회장, 선거대책본부), 히라사와 가쓰에(간사장 대리, 선거대책본부), 모리야마 히로시(위원, 자민당 간사장), 이와야 다케시(부간사장, 외상), 나카다니 겐(간사장, 방위상) 등.

(3) 우회로로서 북일관계

- 이시바 수상은 평양과 도쿄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한다는 것을 공약으로 제시. 이후

‘가족회’ 등의 반발에도 이를 철회하지 않음. 다만 낮은 지지도 속에서 추진력을 얻지 못하고 있음. 만일 북일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진다면 이를 계기로 한반도-일본 관계는 새로운 역사단계로 진입 가능.

- 그런 의미에서 이시바 내각 탄생은 일본 국내적으로는 아베 정치를 종식시키고, 국제적으로는 신냉전을 회피하게 하는 기회이기도 함. 특히 일본 주류사회에서 네오콘 글로벌리스트-친미우익 동맹파들이 퇴장하거나 변신할 가능성. 트럼프가 북일정상회담에 나서고, 이시바가 북일 국교정상화를 추진한다면 동아시아에서 다극화 추세가 가속화.
- 우리 정부에게는 이시바 내각 탄생을 남북한 대결구도 완화의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 북한과 일본이 대화를 시작한다면 이를 환영하고 적극 협조하는 한편, 새로운 전략적 구상으로 대응. 그 과정에서 과거사 문제의 진전을 시도.

(4) ‘하나의 전장(One Theater)’ 구상 독해법

- 트럼프 발 관세 전쟁에 일본은 ‘하나의 전장(One Theater)’ 개념으로 대응. 후에 ‘오션(OCEAN, One Cooperation Effort Among Nations)’ 구상으로 조정.
- ‘하나의 전장’ 개념은 지난 3월 30일,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이 도쿄를 방문한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의 회담 자리에서 제시. 한반도와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하나의 전장(戰場, Theater)으로 묶어, 이 지역에서 미일동맹을 중심으로 동지국(同志國, like-minded countries)들과의 방위협력을 강화시켜 나간다는 구상. 구체적으로는 호주와 필리핀, 그리고 윤석열 정부 이후 동지국 취급을 받게 된 한국을 포함.
- “일본이 서태평양에서 자체 방위, 집단 방위에 훨씬 더 적극적이고 확대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의 발언에 대한 대응임을 확인할 필요. 이러한 구상이 정책으로 채택되어 현실화되면 미국과 중국에 더해, 러시아와 인도 등으로 구성되는 지역패권 국가 대열에 일본이 끼어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
- ‘하나의 전장’ 개념이 일본 자위대에 통합작전사령부가 설치된 직후에 나왔다는 점에도 주목. 통합작전사령부는 일본 육해공 자위대를 통합 지휘하는 상설조직으로, 지난 3월 24일에 설치됨.

- 미국의 바이든 전 정부는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 발족에 맞추어 주일미군을 재편하여 통합군사령부를 신설한다는 계획을 수립. 트럼프 정부 출범 후 경비가 삭감되어 중단됨(CNN, 2025.3.19.). 만일 이 계획이 폐기되는 수순으로 가게 되면 인도 태평양에서의 ‘미일동맹 일체화’ 대신 ‘미일의 지역분담’ 구상이 현실화할 수 있음.
- 5월 31일, 나카타니 방위상은 상그릴라 대화에서 OCEAN 구상 제시.
- 한미일의 안보협력 강화가 통합사령부 논의로 발전되는 것을 경계.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문제보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일본의 ‘간섭’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 문제.

(5) 일본의 양철외교

- 한편 미일동맹 강화의 이면에서 전개되는 일본의 해징 외교에도 충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양쪽을 둘 다 붙잡는다는 의미가 있음. 이를 ‘양철(兩綴) 외교(더블바인드 외교)’라고 부를 수 있음.
- ‘양철 외교’의 기미는 이미 기시다 내각 때부터 보이기 시작. 기시다 내각은 바이든 정권에 호응해서 한미일 안보협력에 집중하면서도, 2023년 히로시마 G7을 전후해서는 가치관으로 세계가 분단돼 있는 현실에 경종을 울리면서 일본 외교의 중심을 글로벌 사우스로 조심스럽게 이동시키고 있음. 일본이 주장하는 FOIP 개념에도 ‘다양성’과 ‘포괄성’ 등 글로벌 사우스를 배려한 워딩이 들어가고 있음.
- 주미대사에 야마다 시게오(山田重夫), 주러대사에 무토 아키라(武藤顯), 주중대사에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를 임명한 데서도 이러한 움직임은 확인할 수 있음.
- 이시바 내각은 중국과의 관계개선에 적극적이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정전 여부에 따른 것이긴 하나, 정전 성립 후 이시바 내각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의 대화 가능성에 따라 북일 정상회담에 나설 수 있음.

(6) 7.20 참의원 선거

- 이시바 수상은 참의원 선거 과반을 지키지 못하고 패배. 중참 양원에서 소수여당으로 전략. 패인은 경제.

- 그러나 이시바 내각은 유지될 전망. 미국의 관세 압박에 대한 대응 등 ‘국난’ 대응이 우선이라는 여론 존재. 다양한 조합의 정책연합으로 타개해 나가려는 모습. 그러나 민주당 등, 내각불신임 움직임이 있으며, 자민당 내에서도 포스트 이시바 움직임 가속될 전망.
- 한일관계, 북일관계에서 이시바의 주도권 난망. 더욱 신중한 대일외교가 필요하며, 일본 내 야당, 특히 민주당을 상대로 한 야당외교 전개 필요성.

5. 지속가능한 한일관계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1) 1998년 한일공동선언과 간 나오토 담화를 미래로 가는 통로로 활용

- 구체적인 과제는 강제동원 배상+일본군'위안부' 합의+북일수교
- 마중물로서 유해송환(조세이 탄광 협력)+일본대중문화 개방 완료

(2) 한일기본조약 제2조와 제3조의 해석 통일

- 한일 정부가 각기 달리 해석하는 조문의 해석을 통일하기 위한 대일외교

(3) ‘기억 책임 화해 재단’ 및 ‘여성인권평화 재단’ 설립을 위한 특별법 마련

- ‘기억 화해 미래 재단’ 구상(문화상 법안)을 계승 발전시켜 국회에서 법적 근거 마련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의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를 독립기구로 확대 개편, 승격

(4) 시민사회와의 대화 기구 및 한일역사화해/미래구상위원회 발족

- 한일화해가 국내정치의 과제임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대응
- 한일 역사화해와 한반도 미래구상을 하나의 과제로 인정하고 한일이 공동 대응
- 서둘러 현안 해결에 나서기보다, 5년의 임기를 고려한 중장기 전략 속에서 통합적 해결을 모색

6. 삼주정립, 이직보원, 장막여신의 한일관계

- 이재명 정부가 초기 대일외교 기조를 실용과 국익을 내세워, 현상유지 및 관리로 설정한 것은 이해할 만하며, 바람직하기도 함. 그러나 무원칙의 현실추수주의로 고정되는 것에 대해 경계할 필요가 있음. 이는 국내적으로도 일본에게도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음. 따라서 일본이 수용할 수 있는 워딩, 우리 국민이 기대할 수 있는 워딩을 개발해 대일외교 원칙을 제시할 필요. 예컨대, ‘세 가지 기둥(삼주정립)’, ‘공정함(이직보원)과 믿음(장막여신)을 통한 화해’ 등임.
- 투 트랙 외교는 삼주정립(三柱鼎立) 외교로 재정립. 과거사 갈등 해소, 사회경제 교류 확대, 평화안보협력 추진 등 세 가지 기둥을 고르게 세워 한일관계를 발전 시킨다는 원칙을 견지. ‘역사봉인-경제분업-안보협력’의 1965년 체제에서 ‘역사 화해-사회협력-평화구축’의 포스트 1965년 체제로. 사회경제 교류 확대에서 특히 성과 도출.

1월 13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와야 외상과 회담에서 경제협력, 동북아 평화 안정, 아픈 과거라는 한 일관계의 세 기둥을 언급. “어떤 관계든 한쪽의 일방적 양보로는 유지될 수 없고, 일본 정부가 보다 전향적 자세로 역사문제를 직시할 때 한일관계가 더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것”, “한일관계 3개의 기둥, 경제협력, 동북아 평화 안정, 아픈 역사라는 세 개 기둥을 균형 있게 세우는 것이 중요”

- 둘째, 과거사 갈등 해소의 원칙으로 이직보원(以直報怨) 즉, 배상 문제를 직접 언급하기보다는 공정함에 입각한 과거사 해결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

노자가 이덕보원(以德報怨, 덕으로서 원수를 갚으라)의 지혜를 말하고, 장제스의 대일정책이 이에 기초해 있으나, 한일관계는 공자가 논어에서 말한 ‘이직보원, 이덕보덕(以直報怨, 以德報德)’의 정신에 입각해서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해서는 공정함에 기초해 책임을 물으며, 일본이 덕으로서 우리를 대한다면 우리 또한 덕으로 대한다는 것.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에서 확인된 ‘과거직시, 미래지향’의 원칙은 이러한 정신에 입각한 것. 공자의 논어 헌문(憲問)편, “그렇다면 덕에 대해서는 무엇으로 갚을 것인가. 원수에 대해서는 곧음(공정함)으로 갚고, 덕에는 덕으로 갚는 것이다. (或曰、以德報怨、何如。子曰、何以報德。以直報怨、以德報德。)”

- 셋째, 장막여신(杖莫如信)의 다짐을 확인할 것. 무라야마 담화는 춘추좌전에 나오는 ‘장막여신’, 즉 ‘의지할 것은 믿음만한 것이 없다’는 말로 맺음. 이를 한일관계의 기초로 재확인.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 한일공동선언, 북일평양선언, 간 나오

토 담화, 2015 외교장관 합의, 2015 유네스코 대사 발언 등, 1965년 체제의 한계를 매우려는 모든 노력을 존중하고 이를 기초로 삼는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이를 신선언, 또는 신조약의 기본 정신으로 명시.



제4회 국회외교안보포럼 - 새 정부의 한일관계: 비전과 전략



발제 1-②

신정부 대일외교의 과제 및 전략: 지속가능한 한일관계의 기반 구축 방안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

신정부 대일외교의 과제 및 전략: 지속가능한 한일관계의 기반 구축 방안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

1. 신정부 대일외교의 과제

-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과 한국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친일과 반일의 양극화된 대일정책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한일관계의 기반 구축을 위한 장기비전 제시 필요
 - 역대 정부에서 한일관계가 갈등과 협력을 반복해 온 배경에 과거사와 위협인식을 둘러싼 ‘이중의 갈등구조’
 - ※ 2012년 이후 한일관계의 ‘잃어버린 10년’
 - 지난 3년의 한일관계 회복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거사 화해가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 한계, 정권교체마다 대일정책의 기초가 바뀌는 한국의 정치환경, 한일관계의 갈등구조 상존 등 현실
 - 양국의 정치 상황으로 인해 한일관계의 관리 태세 및 60주년 사업 추진 모멘텀 약화
(일) 이시바 내각의 불안정한 정권 기반, 7월 참의원 선거 등으로 한일협력에 대한 일본 측의 강력한 동기부여 제약
(한) 탄핵정국, 대선 정국, 정부 교체로 대일외교의 관리 기능 약화
 - 양국의 중장기 국가전략에서 공통분모를 확대해 나가는 실질 협력이 중요한 바,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를 향한 미래비전 제시 필요
-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공조 필요성 증대
 - 외부 환경의 불확실성에 비례하여 한일 양국의 안보 및 경제적 이해관계가 수렴하고, 양국의 대외관계에서 상대국의 전략적 가치 및 상호 친화성 증가
 - 북러접근과 북한의 군사력 증강,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중국의 군사력·경제력·기술력 증대, 특히 트럼프 2기 정부의 비용 중시 접근(동맹 관리의 의지 약화, 관세 및 방위비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협력 중요

- 한일협력은 원활한 한미관계는 물론 대북한 공조, 중국 및 러시아 등 주변국 관계의 안정화를 위한 조건 (한국의 국가전략에서 “한미동맹은 필수, 한일협력은 선택”에서 “한일협력도 필수”로)

○ 신정부의 ‘국익중심 실용외교’와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 실현을 위해 일본 측의 적극 호응을 통한 한일협력의 선순환 구조 정착 중요

- 정부 교체에 따른 한일관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신정부 대외정책의 효과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한일관계의 순조로운 출발이 중요
-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도모”를 대일외교의 목표로 설정하고, 그 방안으로 △경제, 안보, 인적교류 등 미래 지향적 한·일 협력 관계 지속,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 유지 발전을 위해 한일 간 협의 협력 긴밀화, △과거사 문제 등 민감한 현안 해결 노력 지속을 제시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 과거사 현안의 해결 노력, 경제, 안보 및 인적 교류 등 실질 협력의 확대, 한미일 등 다자협력의 유지발전을 기조로 하는 투-트랙 접근법
 - ※ 이재명 대통령 취임사 (2025.6.4)
 - ※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리셉션 메세지 (2025.6.16)
- 일본은 한국의 진보정권 출현 시 한일협력의 동력이 약화되고, 한국의 인도태평양 관여가 축소되고 대외전략의 축이 한반도 중심으로 선회할 가능성 우려
- 일본 측의 ‘자기충족적 예언’을 경계하고 적극적인 호응을 유도할 필요
 - ※ 주일한국대사관 주최 한일관계 60주년 리셉션(2025.6.19)
- 신정부의 대일정책을 구체화하고, 한일협력의 의제와 일정에 대해 조속한 정부 간 협의 중요

8월 광복절 기념사, 종전기념 담화/메세지, 셔틀외교, 다자외교 계기 정상회담 등을 한일관계 발전 계기로 활용

2. 대응 전략

1) 과거사 현안 및 돌발 변수의 관리

○ 구조적 갈등요인의 선제적 관리(사전 대비 & 축소지향적 대응)

- 일관성 있는 대일정책 추진은 돌발 변수의 철저한 관리에 의존
 - 강제동원, 위안부, 독도 관련 행사 및 교과서 기술,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등
- 한일의 인식 차이를 인정하고, 과거사 문제가 한일협력을 제약하지 않도록 관리
 - ※ 나가시마 아키히사 총리보좌관, 과거사 문제 관리 위한 3원칙 (2025.6.16)
- 2025년에 폭발성 있는 이슈는 한일 대륙붕협정 문제인바, 협정의 일방적 종료 경계

【강제동원문제의 대응방안】

▲ 기존 합의 및 해법의 유지 보완

- △ ‘제3자 변제’안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관련 정부 입장의 확인
- △ 위안부 합의
 - 화해치유재단 해산 이후 잔금 문제 등 협의
- △ 대국민 설명 노력
 - 기존 해법 유지의 불가피성 설득 및 국민 공감대 조성
- △ 일본 측 호응
 -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과 및 ‘자발적 기여’는 한계 cf.한일미래기금
 - 종전 80주년 담화/메세지 관리
 - 강제징용 진상규명 자료제공

▲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포괄적 입법 조치

- △ 초당적 특별법 제정
 - 법정부 차원의 전담 조직 및 재단(기칭 기억·화해·미래재단) 설립하여
 - △ 승소 확정 원고에 대한 위자료 지급, △ 소송 누락 강제동원피해자 문제의 포괄적 해결,
 - △ 추도·위령 사업, △ 국외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조사·연구·교육 등 실시
- ※ 문화상의장등14인안(2019.12.18), 윤상현의원등12인안(2020.6.8)

▲ 한일 공동사업

- △ 유골봉환
 - 2005년 한일유골합의로 일본 정부가 조사한 1700여 구의 유골이 존재하고 현재도 발굴 진행 중인바, 유해의 조사·발굴·수습·봉환의 체계적 이행
- △ 한일신시대공동연구(下記)에 과거사 분과 설치
 - 피해당사자, 지식인, 시민단체로 구성하여 과거사 현안 관련 정부안 제출

2)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 협력사업

○ 다양한 기념사업의 실시

- 양국 정부 주도의 리셉션, 학술회의 등을 예정대로 추진
- 우리 정부 및 해외 공관 주도의 공공외교 행사
- 양국 지자체 및 민간 주최 행사 활성화

○ 한일미래비전 선언을 향한 제3기 한일신시대공동연구 추진

- 한일정상회담 계기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방안의 공동연구 제안
제3기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를 출범시켜 그 연구 성과를 토대로 202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30주년에 한일 신(新)비전 선언을 추진
- ※ 과거 사례로 역사공동연구와 신시대공동연구

【제3기 한일신시대공동연구 운영안】

- (목적) 분야별 한일협력 방안 도출 및 한일 신비전 선포 준비
- (구성) 외교안보, 경제, 과거사, 사회문화 등 4개 분야
- (사무국) 한국은 동북아역사재단 또는 국립외교원, 일본은 일한문화교류기금
- (추진 절차) 외교부 의제 협의 → 한일 정상회담(공동연구 합의) → 양국 외교부 실무급 협의(연구위원 구성 및 사무국 설치 등)

3) 실질 협력의 확대

○ 한일 간 소통 채널 강화

- 정부 간 협의체
정상회담 및 셔틀외교 활성화
외교, 재무, 경제, 국방 등 분야의 각료회담 및 실무 협의의 정례화
한일 각료급 2+2 신설
- 초당파 의원 외교 강화
정당의 의식 변화와 의원의 세대교체 및 국제정세 변화를 반영한 의원 교류

○ 실익과 국민 체감형 한일협력 확대

- 경제적 상호의존 심화 방안

한국의 CPTPP 가입

한일 통화스왑 확대

제3국 시장의 공동진출

민간 주도의 한일경제공동체 논의

공동의 산학연구

- 첨단기술, 에너지 협력

반도체, 우주, 인공지능, 양자컴퓨터, 바이오, 신소재

재생 에너지와 수소 에너지

- 경제안보

주요광물 공급망 및 공동조달, 첨단기술 표준, 사이버 안보 등

- 청년 일자리, 스타트업 육성

- 문화, 스포츠 교류

상호 문화개방 확대

스포츠 공동리그(축구, 야구) 도입

월드컵 등 국제행사 공동개최

- 관광 산업 협력

크루즈 노선, 지방 간 전세기 노선 확대

출입국 절차의 간소화 조치 유지

- 공통과제 연구

저출산, 지방 소멸, 인프라 노후화, 연금 및 복지 재원 문제 등 공동연구

4)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협력

○ 국제질서의 불확실성 대응 위한 한일협력

- 미국의 방위비 압박, 관세 정책 대응

- 북-러 접근과 북한 군사기술 고도화 대응, 한미일 공동군사훈련, 북미협상과 북한 비핵화 문제, 확장억지력, 동맹의 재편 등

한미일/한일 안보협력은 대북한 억지력과 비전통 안보를 우선

- 규범 기반 국제질서의 유지 (역내국이 지지 가능한 목표 공유)

- 지역이슈(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동남아시아), 해양안보, 글로벌 사우스 개발원조 등 지역 및 글로벌 현안 협력

○ 다자외교 협력

- 한중일 협력과 한미일 협력의 상호 보완적 추진
- G7 확대 및 한국 참가
- NATO정상회의 참석(IP4)
- 2025년 APEC(한국)과 한중일정상회의(일본)의 성공 개최 협력
10월 APEC 계기 한일정상회담 및 한미일정상회담 추진
- ASEAN, UN 등 다자외교 협력



제4회 국회외교안보포럼 - 새 정부의 한일관계: 비전과 전략



발제 2

한일 경제관계, 새로운 협력 모델의 탐색

이창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한일 경제관계, 새로운 협력 모델의 탐색

이창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글로벌 패러다임의 변화와 한일 경제협력의 필요성

1. 지정학·지경학 리스크의 구조적 심화

- 21세기 들어 글로벌 공급망은 ‘저비용·고효율’에서 ‘탄력성·안정성’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음.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곡물·에너지 공급망이 붕괴된 데 이어,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대만해협 긴장이 심화되면서 반도체, AI, 배터리 등 핵심 전략물자의 공급망도 지정학 리스크에 노출되었으나, 세계은행(2023)에 따르면, 글로벌 공급망 붕괴 취약도 순위에서 한국은 1위, 일본은 7위를 기록함.
- 두 나라 모두 에너지, 식량, 핵심 소재·부품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자국 내 생산만으로는 안정적인 조달이 어려운 구조 속에서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

2. 글로벌 거버넌스의 재구축과 가치동맹의 중요성

- 미국 내 정치 양극화와 자국중심주의(America First) 기조는 트럼프 2기 출범으로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다자체제는 사실상 무력화되고, 미국이 주도하는 일방주의 통상정책이 본격화됨.
- 중국은 시진핑 3기 체제 출범 이후 1인 권위주의 통치를 강화하면서, 대만해협, 남중국해, AI·반도체 등 전략산업을 둘러싼 지정학·지경학적 불확실성을 고조시킴.
- ‘미중 양강구조 + 다자체제 약화 + 중견국 역할 증대’라는 복합패턴 속에서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등 기본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이 글로벌 거버넌스 재편 과정에서 협력할 필요성이 증대.

3. 첨단기술산업의 패러다임 시프트

- AI, 반도체, 양자컴퓨팅, 바이오, 우주항공 등 첨단기술 산업의 급부상은 국가 간 경제력과 안보력의 핵심 지표로 자리잡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산업은 막대한 자본투입, 고급 인재의 대규모 확보, 생태계 내 기업·기관간 수평·수직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단일국가만으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한계가 분명해 한일 양국의 기술·인재·자원의 풀링(pooling)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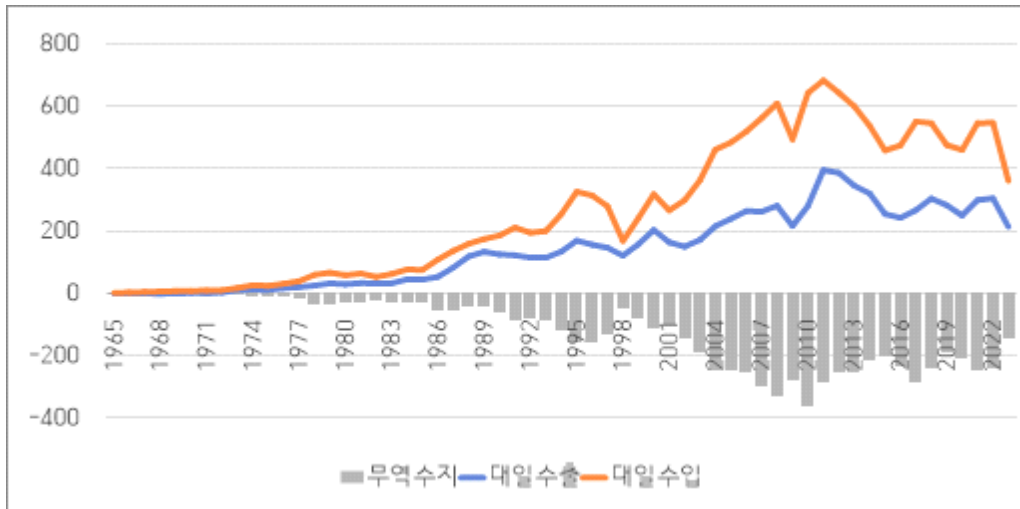
4. 글로벌 사우스 전략과 시장확대

- 동남아, 인도, 중동, 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의 경제·인구 잠재력이 부상하는 가운데, 한일 양국은 DX(디지털), GX(그린), BX(바이오)를 연계하여 표준체계를 공동 구축하고, 글로벌 사우스 시장 진출과 투자 확대를 통해 상호 윈-윈의 협력 모델을 모색할 필요.

한일 경제협력의 세 가지 구조적 한계

1. 악화되는 직접교역과 투자, 변화된 분업구조의 제약

- 1965년 이래로 한국과 일본은 수직적 분업체계를 기반으로, 일본의 소재·부품·장비를 한국이 수입해 가공·조립·수출하는 구조였으나, 2010년대 들어 중국이 글로벌 중간재 허브로 부상하고, 한국이 소재·부품 국산화를 추진하면서 한일 무역 구조는 수평적 관계로 전환됨.
- 그 결과, 2011년 대일 수출입액 모두 정점을 찍고 감소세에 들어섰고, 대일 무역적자도 2010년(361억 달러) 이후 감소, 일본의 대한 직접투자 역시 2012년 45.4억 달러를 정점으로 하락 추세임.



2. 경제안보 이슈의 심화와 협력 리스크

- 2019년 일본의 반도체 3대 소재 수출규제(경제적 강압행위)는 한일 경제관계에 있어 ‘경제안보’ 개념의 중요성을 각인시킨 사건임.
- 이후 일본은 2022년 5월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제정, 동년 12월 11개 중요물자 지정(2023년 12월 수소·암모니아 추가 지정), 2023년 11월 특정사회기반사업자 선정(소프트뱅크, 라인야후 포함)등을 통해 경제안보 체제를 강화.
- 2024년의 라인야후 사태는, 일본 내 기업의 데이터·통신 인프라가 경제안보 이슈로 직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임.
- 이러한 규제환경은 한국 기업이 일본과 협력할 때 새로운 리스크로 작용하며, 협력대상 선정, 데이터공유, 지식재산권 관리, 투자구조 설계 등에서 경제안보 차원의 사전 검토와 대응전략이 필요함.

3. 트럼프 변수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무역·관세 정책을 대대적으로 전환하면서, 한일관계는 대미 구심력(미국 중심 협력 강화)과 대미 원심력(미국 중심 이탈) 공간 속에서 경쟁과 협력의 다층적 국면을 맞고 있음.

	對美 구심력	對美 원심력
韓日 협력	알래스카 LNG 개발	GX, CPTPP
韓日 경쟁	자동차, 철강	AI, 첨단 반도체

- 향후 몇 년간 한일 경제관계는 대미 구심력과 원심력, 그리고 양국 간 경쟁과 협력의 조합에 따라 네 가지 국면으로 전개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에 공동 투자를 요청한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는 대미 구심력과 한일 협력이 동시에 강화되는 사례임.
- 대미 원심력이 강화될 경우 미국의 일방주의로 다자협력 공백이 생기면 한국과 일본은 기후변화 대응, 수소경제, 재생에너지 등 공동과제에서 기술 교류와 공동 투자를 확대하고, CPTPP·RCEP 같은 미국 비참여 협력체 내에서 중견국으로서 자유무역질서 재구축에 공동 리더십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음.
- 대미 구심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한일 간 경쟁이 심화되는 시나리오로는, 현대차가 미국 내 전기차·AI 개발에 310억 달러를 투자하고 닛산도 생산 이전과 현지화 확대를 추진하는 등 자동차 시장 경쟁이 격화되고,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 관세 25% 부과로 자동차용 강판·배터리 소재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직접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음.
- 대미 원심력이 강화되면서 한일이 경쟁하는 경우에는, 일본이 반도체·AI 등 첨단 분야에서 미니 생태계 구축과 핵심 소재·부품 국산화를 본격화하고 라인 사태를 통해 AI 데이터 자립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등 기술 자립을 가속화함에 따라, 한국도 이에 대응할 수밖에 없음.

한일 경제협력의 새로운 모델과 전략

- ①지정학·지경학 리스크의 심화, ②글로벌 거버넌스 재구축과 가치동맹의 중요성, ③첨단기술산업의 패러다임 시프트, ④글로벌 사우스 전략과 시장확대 측면에서 한일 경제협력은 반드시 필요하나, ①악화되는 직접교역·투자와 변화된 분업구조, ②경제안보 이슈와 협력 리스크, ③트럼프 변수는 한일 경제협력의 한계로 볼 수 있음.
- 이에 본 발제는 한일 경제협력이 직면한 한계를 극복하고, 협력의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해 다음의 다섯 가지 구체적인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하고자 함.
 - I. 공급망 협력 시나리오(중요광물, 식량, 에너지, 원자재 등)
 - II. 첨단 제조업 협력 시나리오(반도체, AI, 양자, 바이오, 항공우주 등)
 - III. 탈탄소 인프라 구축 협력 시나리오
 - IV. 한일 청년 화이트칼라 노동시장 통합 시나리오
 - V. 한일 자본시장 통합 시나리오

I. 공급망 협력 시나리오(중요광물, 식량, 에너지, 원자재 등)

1. 한일 공급망 협력이 필요한 이유

- 2010년대 초반 한일 경제관계는 기존의 수직 분업 구조에서 벗어나, 양국이 상대국으로부터 중간재와 자본재를 수입해 이를 가공·조립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수평적·상호의존적 분업 구조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무역과 투자가 정점을 기록.
- 그러나 이후 중국의 급부상, 산업 구조 재편, 글로벌 공급망 재구성으로 인해 한일 간 직접 교역 규모는 감소 추세로 전환.
- 최근 들어 광물, 식량, 에너지 등 핵심 자원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일 양국은 공급망 리스크가 더욱 부각.(예를 들어, 한국은 중국의 요소수 수출 규제로 물류 대란을 경험했으며, 일본도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으로 산업 전반에 타격을 입음)
-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가치사슬 재편과 공급망 복원력이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음.

2. 분야별 협력 방안 시나리오

2-1 전략물자 공동 대응

○ 전략물자 리스트 상호 매핑

- 일본의 12대 특정 중요물자(반도체, 배터리, 클라우드 서비스, 영구자석, 공작 기계·산업용 로봇, 항공기 부품·소재, 중요광물, LNG, 선박부품, 항생제, 비료 원료, 수소·암모니아)와 한국의 공급망 3법 지정 품목을 비교
- 품목별 공급망 의존도(P/T 지표 등)와 대체 가능성, 양국 내 생산역량을 분석하여 협력 우선순위를 설정

○ 공동 비축 및 조달 인프라 구축

- 일본 정부의 2.18조엔 공급망 보조금과 한국의 공급망 3법 예산을 연계
- 비상시 활용 가능한 공동 비축센터를 구축하고, 보관·물류·통관 시스템을 상호 표준화
- 민관 공동조달 플랫폼을 운영해 기업별 재고 부담을 완화하고, 조달 리스크를 분산

○ 기술·R&D 협력

- 희토류 가공, 배터리 소재 정제 등 일본의 강점 기술과 한국의 대량생산·조립 기술을 연계
- 공동 R&D 펀드를 조성해 기술표준 통합과 공급망 내 기술 장벽을 해소

2-2 식량 공급망 협력

○ 공동 조달 및 비축 체계 구축

- 밀, 콩 등 주요 곡물의 공동 구매 계약 및 비축시설 공유
- 공동 재고관리 시스템을 통해 급격한 가격 변동·공급 차질 대응

○ 제3국 농업투자 및 계약 재배

- 호주, 미국, 브라질 등 곡물 생산국에서 한일 공동 투자·계약 재배 모델을 도입
-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국제 공급망 다변화

2-3 에너지 공급망 협력

- LNG 공동 구매 및 Cargo Swap 확대
 - JERA(일본)-KOGAS(한국)의 LNG 공동 구매 협력을 확대
 - Cargo Swap 방식으로 구매 시기, 물량, 운송 비용 최적화
- 수소·암모니아 청정에너지 협력
 - 수소·암모니아 생산·수입·저장·유통 인프라 공동 투자
 - 호주, 동남아, 중동 등 자원국과의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추진

3. 협력의 한계 및 우려

- 일본은 2022년 12월, 반도체, 배터리, 클라우드 서비스, 영구자석, 공작기계·산업용 로봇, 항공기 부품·소재, 중요광물, LNG, 선박부품, 항생제, 비료 원료 등 11개 품목을 특정 중요물자로 지정하였고, 이후 수소·암모니아를 추가하여 총 12개 전략물자를 관리.
- 한국도 ‘공급망 3법’을 통해 반도체, 이차전지, 희토류, 특수광물 등 유사 품목을 전략 중요물자로 지정해 비축과 관리 체계를 강화.
- 한일 양국은 현재 군사·안보 동맹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안보 차원에서 지정된 중요물자의 공급망을 상호 공유·관리하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
- 공동 비축, 예산, 시설 운영 비용 분담에 대한 협의가 복잡.
- 국내 산업 보호주의와 기업 간 우선 공급권 이해관계 충돌 가능.

II. 첨단 제조업 협력 시나리오(반도체, AI, 양자, 바이오, 항공우주 등)

1. 첨단 제조업 협력이 필요한 이유

- 일본은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고, 한국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대량생산과 시스템 통합 역량이 뛰어나, 첨단산업의 가치사슬 전 단계에서 상호 보완적 협력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음.

- 첨단산업은 막대한 투자와 고급 인재의 지속적 확보가 필수이지만, 미중에 비해 양국 모두 단독 대응에는 한계가 있어, 자본과 인력을 상호 보완·공유함으로써 기술개발 속도와 산업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미중 기술패권 경쟁, 글로벌 지정학 리스크 심화로 첨단산업 공급망의 안정성과 복원력이 국가경제안보의 핵심 요소가 되었으며, 한국과 일본은 중복투자 최소화, 공급원 다변화, 공동 비축체계 구축 등 전략적 협력을 통해 대응력을 높일 수 있음.
- 6G, AI 윤리, 양자 암호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국제 표준 선점이 시장 지배력을 결정하기 때문에, 일본의 규범 구축 경험과 한국의 응용·상용화 역량을 결합하면, 미중 양강 구도 속에서 중견국 연대의 표준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음.

2. 분야별 협력 방안 시나리오

2-1 반도체

- 소재·부품·장비 분야 협력
 - 일본의 첨단 소재·부품·장비 기술력과 한국의 반도체 대량생산 역량을 결합하여, 공동 R&D 과제 발굴, 시험생산·품질평가 플랫폼 구축, 공정 테스트베드 공유 및 표준화 협력.
- 첨단 공정·패키징 기술 공동 개발
 - 첨단 반도체 경쟁의 핵심인 2.5D·3D 패키징과 고급 공정 기술 분야에서, Rapidus, LSTC, JASM 등 일본의 국책·민간 프로젝트와 한국의 파운드리·패키징 기업 간 기술 교류와 공동 투자를 통해 고대역폭 메모리(HBM)와 AI 반도체용 고성능 패키징 솔루션 개발을 함께 모색.
- 공급망 안정성 및 경제안보 협력
 - 반도체 공급망의 상호 의존성이 높은 한국과 일본은, 공급망 충격 대응을 위한 공동 비축 체계 구축, 경제안보 대화 채널을 통한 소부장 품목 공동 관리, WTO·IPE F·CPTPP 등 다자 협의회 내 규범 공동 대응을 통해 안정성과 대응력을 강화.
- 인재양성 및 연구개발 거버넌스 구축

- 고급 인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일 양국은 대학과 연구소 간 반도체 전문인력 교류와 공동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AI 반도체와 양자컴퓨팅용 반도체 등 차세대 분야의 박사급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한일 공동 반도체 혁신 연구센터 설립.

2-2 AI

○ AI 거버넌스와 국제 표준 공동 대응

- 한일 양국은 G7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GPAI, 서울 AI 서밋 등 다자체제에서의 논의 경험을 바탕으로, AI 안전성, 윤리, 거버넌스 분야에서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국제표준 및 규범 경쟁에서 중견국 연대의 전략적 입지를 강화해야 함.

○ AI 반도체·인프라 공동 개발

- AI 서비스의 고도화에 필수적인 AI 특화 반도체(메모리, NPU, LLM 전용칩) 및 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에서, 일본의 첨단 소재·장비 기술력과 한국의 시스템반도체 설계·생산 역량을 결합해 공동 R&D, 파일럿 생산라인, 테스트베드 구축을 추진할 필요.

○ 산업·기업 간 AI 융합 솔루션 개발 협력

- 제조업, 금융, 헬스케어, 모빌리티 등 양국 산업 분야별 강점을 활용해, AI 응용서비스 공동 개발, POC(Project of Concept) 실증, 시장 공동진출을 확대함으로써, 글로벌 AI 융합 시장에서 경쟁력과 영향력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음.

○ AI 인재 양성과 연구 네트워크 구축

- AI 전문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학·연구소·기업 간 한일 공동 석·박사 교육 프로그램, 인턴십 교류, 공동 연구소 설립을 통해 AI 기초·응용·윤리 분야 전주기 인재양성 생태계를 구축.

○ AI 스타트업 및 혁신 생태계 연계

- 한일 양국의 AI 스타트업, 벤처캐피털, 대기업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연계해, 공동 엑셀러레이팅, 상호 진출 지원, 투자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혁신의 속도와 범위를 확대.

2-3 양자

○ 한미일 삼자 연구·개발 네트워크 강화

- 한일 양국은 시카고대·도쿄대·서울대가 참여 중인 1억 달러 규모의 삼자 양자 연구 프로젝트와 같은 사례를 확대하여, 양자컴퓨팅, 양자 센서, 양자통신 등 핵심 분야에서 공동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삼자 연구 플랫폼을 체계화해야 함.

○ 양자기술 인재양성과 교육 협력

- 양자 분야의 심각한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양국 대학과 연구기관 간 공동 석·박사 과정, 단기 집중 교육 프로그램, 학부 연계 교환 과정을 신설하여 기초와 학부부터 응용·공학까지 전주기 인재양성 생태계를 구축.

○ 양자기술 표준화 및 거버넌스 공동 대응

- 양자 암호통신, 양자컴퓨팅 알고리즘, 양자 네트워크 보안 등에서 국제 표준화 논의에 한일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GPAI 등 AI·양자 통합 규범 플랫폼에서도 중견국 연대의 규범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

○ 정책·제도 기반 공동 구축

- 한일 모두 양자기술을 국가안보·경제안보 차원의 전략기술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양국 정부 간 양자기술 정책대화 채널을 상설화하여 투자 촉진, 지적권 보호, 연구윤리, 안전 가이드라인 등 제도 기반을 조율.

2-4 바이오

○ R&D 및 규제자유특구 기반 공동 실증 확대

- 한일 양국은 충북 글로벌 혁신특구와 일본 쇼난 I-Park 간 협력 사례처럼, 세포·유전자 치료제, 오가노이드 기반 재생의료 등 첨단 바이오 기술의 공동 실증과 시험생산을 확대하고, 규제자유특구를 연계한 현장 중심의 공동 R&D 플랫폼을 구축해야 함.

○ 스타트업·벤처기업 네트워크 강화

- 한일 바이오벤처 합동 IR과 경제인회의 협력 선언 사례를 바탕으로, 양국 바이오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글로벌 VC가 정례적으로 교류하고 공동 투자·시장 진출을 모색할 수 있는 네트워크와 플랫폼을 구축.

○ 인허가 및 제도 협력 체계 정비

- 양국 기업의 상호 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법인 설립, 인허가, 임상시험 승인 등 규제 절차를 표준화·간소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간 바이오 정책협 의체와 제도 협력 채널을 상설화.

○ 글로벌 시장 공동 진출 전략 수립

- 보스턴 합동 IR 등 글로벌 진출 협력 사례를 확장하여, 한일 바이오기업이 공동 IR을 통해 글로벌 VC 및 다국적 제약사와 협력하고, 아시아·미주 등 제3국 시장에 동시에 진출할 수 있는 전략과 지원 체계를 마련.

2-5 항공우주

○ 위성 발사체 공동 활용 및 상호 지원 체계 구축

- 한국의 KOMPSAT-3 위성을 일본의 H-IIA 로켓으로 성공적으로 발사한 사례처럼, 일본의 안정적인 발사체 기술과 한국의 위성 제작·운용 역량을 결합하여 상호 발사 수요를 지원하고, 양국 발사체·위성산업의 시장 경쟁력과 비용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는 협력 모델을 구축.

○ 우주탐사 및 운영기술 공동 개발

- KARI와 JAXA가 각각 추진 중인 달 궤도선, 달 착륙선, 심우주 탐사 계획에서, 궤도 설계, 탐사 장비, 통신·운영 기술의 공동 개발과 시험 협력을 통해, 아시아 차원의 탐사기술 자립과 국제협력 역량을 강화.

○ 위성 데이터·관측정보 공유 및 활용 협력

- 양국이 참여 중인 APRSAF(아시아-태평양 우주개발 회의체)에서의 협력을 심화 하여, 지구관측위성(EO) 데이터, 기후·재해 감시, 농업·환경 모니터링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AI 분석 응용 서비스 공동 개발.

○ 우주안보와 PNT(정밀위치측정) 공동 대응

- 미중·북핵 위협, 위성 GPS 교란 등 안보 리스크 대응을 위해, 일본의 QZSS(준천정위성)와 한국의 KPS(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개발을 연계하여, 정밀위치·항법·시각(PNT) 시스템을 공동으로 구축하고 우주안보·사이버보안 협력체계를 강화.

3. 협력의 한계 및 우려

- 한일 첨단산업 협력은 일본의 경제안보법과 중요물자 규제, 과거 수출규제 사례에서 보듯이 양국 관계 악화나 안보 정책 변화에 따라 협력 기반이 쉽게 흔들리는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음.
- AI, 반도체, 양자, 항공우주 등 분야에서 한일 양국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자이자 표준·시장 선점 경쟁을 벌이는 관계이기 때문에, 공동 개발보다는 독자 개발을 우선시하려는 경향이 협력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함.
- 바이오 임상, AI 데이터 활용, 반도체 안전규제 등에서 양국의 법·제도적 차이와 지식재산권 귀속 문제는 실질적인 공동 연구개발과 시장 진출을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이 될 수 있음.
- 한일 양국은 언어·문화·연구운영 방식의 차이로 인해 인력 교류와 장기적 공동 프로젝트 추진에서 마찰과 한계를 드러낼 수 있음.

III. 탈탄소 인프라 구축 협력 시나리오

1. 탈탄소 인프라 구축 협력이 필요한 이유

- 한국과 일본은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가 80~90%로 매우 높아,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리스크에 취약하기 때문에, 수소·암모니아·재생에너지 등의 공급망을 공동 구축함으로써 에너지 안보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그린 수소, 암모니아, CCS(Carbon Capture & Storage) 등 탈탄소 인프라 구축은 막대한 초기투자와 장기간의 기술개발이 필수적이므로, 한일 양국이 자본·기술·인재를 풀링(pooling)해 투자 위험을 분산하고 사업화를 가속화할 필요 있음.
-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미국 IRA 등 글로벌 기후 규범 강화 속에서, 한

국과 일본이 탈탄소 인프라를 선제 구축하지 않으면 수출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므로, 공동으로 규범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기술표준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필요 있음.

- 동남아, 인도, 중동 등 아시아·글로벌 사우스 지역에서 수소·암모니아,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한일이 탈탄소 인프라 개발 경험과 금융역량을 결합하면, 제3국 시장에서의 공동 진출과 경쟁력 제고가 가능.

2. 협력 방안 시나리오

- 한일 양국은 수소·암모니아 생산, 운송, 저장, 활용 전 단계에서 공동 투자와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일본의 JERA·Iwatani의 액화·저장 기술과 한국의 롯데·현대 수소유통 및 암모니아 발전 기술을 결합함으로써 아시아 최대 규모의 수소·암모니아 밸류체인 구축을 실현할 수 있음.
-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포집·저장·활용(CCUS) 기술의 공동 R&D, 실증플랜트 구축, 기술표준화를 추진하고, 일본의 포집·해저저장 기술과 한국의 화력·제철소 CO₂ 포집운영 경험을 결합해 저비용·고효율 CCS 솔루션을 개발 가능.
- 양국은 동남아, 중앙아시아 등에서 태양광·풍력 발전소 공동 개발, 투자, 운영 모델을 설계하고, 향후 아시아 슈퍼그리드(ASEAN-Japan-Korea HVDC interconnection) 구상과 연계하여 역내 재생에너지 공급망을 확대 가능.
- 그린수소, 암모니아 연료, CCS 등에서 국제 표준화 기구(ISO) 대응을 위한 공동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표준·인증체계 공동 개발을 통해 규범 경쟁에서 중견국 주도권을 확보.

3. 협력의 한계 및 우려

- 한국과 일본은 수소·암모니아 인증기준, CCS 규제체계, 재생에너지 인허가 절차 등에서 법·제도·규제 체계가 상이하여, 공동 프로젝트의 설계·승인·운영 과정에서 복잡한 조율과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
- 양국 모두 수소·암모니아 글로벌 시장 선점을 국가 전략목표로 삼고 있어, 공동

개발과 표준화 협력과 동시에 시장·표준 선점 경쟁이 병존하며, 협력이 일정 단계 이상 진전되면 이익 배분과 우선권 문제에서 충돌이 발생할 우려.

- 수소·암모니아, CCS, 재생에너지 핵심 기술·자원 공급망은 미중 패권경쟁, 글로벌 지정학 리스크의 영향을 직접 받기 때문에,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경제안보 전략과 상호 의존 심화를 통한 협력 전략이 충돌할 가능성.
- 그린 수소, CCS, 암모니아 발전 등은 기술적·경제적 상용화 단계가 아직 초기로, 한일 공동 투자라 해도 수익성 불확실성과 막대한 초기투자 부담이 협력 지속성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

IV. 한일 청년 화이트칼라 노동시장 통합 시나리오

1. 한일 청년 화이트칼라 노동시장 통합이 필요한 이유

- 한국의 청년 고용률은 2025년 1월 기준 15~29세 44.8%로 4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21만8,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함.
- OECD 기준 15~24세 청년 실업률은 한국이 5.9%, 일본이 3.9%로 나타나 한국 청년 고용 상황이 일본보다 열악함.
- 일본은 2040년까지 노동력 부족 규모가 최대 1,1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숙련 화이트칼라 인력 수요가 높아질 전망이다.
- 일본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40년까지 약 2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이미 29%를 넘어 고령화가 노동시장에 큰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음.
- 한국 대졸 초임은 일본보다 높아 일본 청년들에게 한국 취업의 경제적 유인이 충분하지만, 비자 요건, 사회보험, 언어·문화 적응 장벽이 노동시장 통합을 제한하고 있음.

2. 현재 양국 청년의 상대국 취업 현황

- 한국 청년의 일본 취업은 과거 제조업·서비스업 중심에서 최근 IT·기술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Google Japan과 협력해 ICT 기업 매칭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한국 청년의 일본 ICT 분야 입사가 촉진되고 있음. 그러나 공식 채용 규모는 아직 제한적이고, 다수가 기업 간 매칭과 MOU 체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며, 실질적인 규모 확대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매칭 플랫폼 구축과 인턴십 기회 확대가 필요함.
- 한국 내 일본 장기체류자는 2020년 말 22,695명에서 2024년 말 29,778명으로 약 31.2% 증가. 대졸 화이트칼라 중심의 취업비자 발급은 여전히 어렵고 워킹홀리데이 비자 후 정규직 전환 및 ICT·글로벌 기업 취업은 쉽지 않은 상황임.

3. 단계별 시나리오

- 첫 번째 단계는 양국 정부가 청년층의 취업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
한국 정부는 E-7 비자의 직종별 고정 연봉 기준(현재 전문인력 2,867만 원, 준전문·일반기능 2,515만 원)을 일본 청년의 한국 취업 초임 수준으로 완화하여 2,300만~2,500만 원 수준으로 조정해야 하며 또한 일본 유학생 대상 한국 기업 인턴십 및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일본 청년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 비즈니스 문화 적응 교육을 강화.
일본 정부는 일본 청년의 한국 취업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한국 취업 준비 교육 및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한국 취업 희망자의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함.
- 두 번째 단계는 양국이 학위·자격 상호인정과 온라인 매칭 플랫폼을 구축하여 청년 취업을 원활히 함.
한국 정부는 일본 대학 졸업생의 한국 기업 취업을 위해 학위와 직종 자격 상호 인정 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IT·회계·경영 등 분야에서 상호 인증 체계를 구축하며, 일본 청년의 한국 취업을 지원하는 온라인 매칭 플랫폼을 개발.
일본 정부는 한국 대학 졸업생의 일본 기업 취업을 위해 동일하게 학위와 자격 상호인정 체계를 마련하고, 일본 기업의 한국 청년 채용 확대를 위해 행정·비자 절차를 간소화하며, 원격근무 고용 시 비자·세금·사회보험 연계의 유연화를 추진.

- 세 번째 단계는 양국의 노동시장 연계를 심화하고 근로자 보호 체계를 강화
양국 정부는 청년의 상대국 노동시장 진입 시 최저임금 근로시간 사회보험 적용을
강화해야 하며 또한 고용보험 상호인정 협약을 체결해 이직하더라도 자국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또한 양국 정부는 청년 이동과 취업 데이터를 실시간 공유하는 공동 통계 시스템을
구축해 정책 수립과 기업 인력계획의 효율성을 높여야 함.
- 네 번째 단계는 사실상 단일 노동시장 체계를 구축해 청년들이 자유롭게 취업·창
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취업·창업을 위해 비자 발급 절차를 자유화하고 사회보험·연금 상호 적용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아울러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일 공동 청년 취업·창업 펀드 조성.

4. 한일 노동시장 통합의 장단점

- 한국 청년의 높은 실업 문제를 완화하고 일본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함으로써 양국
모두 경제·사회적 구조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음.
- 청년들이 국경을 넘어 취업과 경력을 쌓음으로써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한일
모두 세계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음.
- 다만 비자, 세금, 사회보험 체계의 연계가 복잡해져 행정비용과 정책 설계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 언어와 문화의 장벽으로 인해 양국 청년 모두 현지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음.

V. 한일 자본시장 통합 시나리오

1. 한일 자본시장 통합이 필요한 이유

- 한국 경제는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대규모 저금리 자금을
생산적 투자로 유치해 성장 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 금융사와의 경쟁과 협력을 통해 서비스 혁신을 이루고, 한국 금융사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해야 함.
-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해 연금, 보험 등 장기투자 수익의 다변화가 필요하며 일본 시장과의 통합은 이를 가능하게 함.
- 통화스왑 확대와 결제·청산 인프라 연계를 통해 금융위기 발생 시 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안정망을 마련할 수 있음.
- 싱가포르, 홍콩, 상하이가 주도하는 동북아 금융허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한국과 일본이 공동 금융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2. 단계별 시나리오

- 현재 한일 간 자본시장은 기본적으로 자유화되어 있지만 금융상품 상호 진출, 기업의 상장, 결제·청산 인프라, 금융감독 공조 모두 미흡한 상황임.
- 첫 단계에서는 양국 금융당국이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 MRA)을 체결하여 자산운용사, 증권사, 보험사의 상대국 진출 요건을 완화하고, 이중과세 방지 협약을 개정해 배당, 이자, 양도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하며, 전문투자자 시장을 상호 개방해 시장 진입 기반을 마련해야 함.
- 두 번째 단계에서는 한국거래소(KRX)와 일본거래소(JPX) 간 공동 상장(Dual Listing) 체계를 구축해 기업의 양국 상장 거래를 가능하게 하고, ETF(상장지수 펀드) 크로스리스팅을 추진하며, 양국 중앙예탁기관(KSD, JASDEC) 간 결제·청산 시스템을 연동해 투자자 편의를 높여야 하며, 통화스왑 규모를 확대해 외환 헤지 비용을 절감하고 블록체인 기반 증권 발행·거래 등 핀테크 실증사업도 공동으로 추진해야 함.
-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일본 개인투자자가 일본 증권사 앱을 통해 한국 주식을 직접 매수하거나, 한국 개인투자자가 한국 증권사를 통해 일본 주식을 직접 매수할 수 있도록 직거래 플랫폼을 허용하고, 소액투자자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신설해 개인 투자자의 해외투자를 장려하며, 한국 퇴직연금이 일본 ETF에 투자하거나 일본의 iDeCo(개인형 확정거치연금), NISA(소액투자 비과세 제도) 계좌에서 한국 ETF

를 편입할 수 있도록 연금자산 운용시장도 일부 통합해야 함.

- 네 번째 단계에서는 한국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일본 금융청 간 공동 금융감독위원회를 설립해 감독 공조를 강화하고,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공동 금융안정 펀드를 마련하며, 역내 통화 바스켓 개발, ASEAN+3의 아시아 채권시장 이니셔티브(ABMI) 확대 등 금융통합 논의도 추진해야 함.

ESMA(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는 EU의 금융상품 및 시장감독청을 의미함.

ABMI(Asian Bond Markets Initiative)는 아시아 역내 채권시장 활성화 이니셔티브를 의미함.

- 마지막 단계에서는 양국 간 자본이동의 완전 자유화를 실현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채권과 인프라 펀드 등 공동 금융상품을 개발하며, 통화와 환율 정책을 공조해 시장 안정성을 높이고, 노동시장과 사회보장제도 통합 논의까지 확대해야 함.

3. 한일 자본시장 통합의 장단점

- 자본을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일본의 저금리 자금을 한국의 성장 산업에 투자하고, 한국 자본도 일본의 저평가 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다변화할 수 있음.
-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ETF, REITs,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이 다양화되어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 통화스왑 확대와 결제시스템 연동을 통해 환리스크를 완화하고 금융위기 대응능력도 강화할 수 있음.
- 일본 대형 금융사의 자본력과 브랜드 파워로 인해 한국 금융사의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음.
- 일본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 한국 금융시장으로 충격이 빠르게 전이될 리스크가 존재함.
- 자본이동의 자유화로 인해 한국의 환율 및 금리 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 있음.

결론

1.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와 한일 협력 필요성

(1) 지정학·지경학 리스크 심화

- 글로벌 공급망 패러다임이 ‘저비용·고효율’에서 ‘탄력성·안정성’으로 전환.
- 미중 기술패권 경쟁, 대만해협 긴장,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반도체·AI·배터리 공급망 리스크 확대.
- 한국(취약도 1위), 일본(7위) 모두 에너지·식량·소재 부품 해외 의존도가 높아 협력 필요성 증가.

(2) 글로벌 거버넌스 재구축과 가치동맹

- 트럼프 2기 출범으로 미국의 자국중심주의·일방주의 통상 강화.
- 중국의 권위주의 강화로 전략산업·지역 안보 불확실성 고조.
- 미중 양강구조, 다자체제 약화 속 민주주의·시장경제 가치 공유국 간 협력 중요성 증대.

(3) 첨단기술산업 패러다임 시프트

- AI, 반도체, 양자컴퓨팅, 바이오, 우주항공 등 첨단산업이 경제력·안보력의 핵심 지표로 부상.
- 막대한 투자와 인재 확보가 필요해 한일 기술·자원·인재 pooling 필요.

(4) 글로벌 사우스 전략

- 동남아, 인도, 중동, 아프리카 시장 확대.
- DX(디지털), GX(그린), BX(바이오) 연계한 표준 공동 구축 및 시장진출 협력 필요.

2. 한일 경제협력의 구조적 한계

(1) 악화되는 직접교역·투자

- 수직 분업체계에서 수평 관계로 전환, 대중국 의존 증가, 소재·부품 국산화로 무역·투자 감소세.

(2) 경제안보 이슈

-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2019), 경제안보법(2022) 등으로 협력 리스크 증가.

(3) 트럼프 변수

- 미국 중심의 구심력 강화 혹은 이탈에 따라 한일 간 협력·경쟁 양상 다변화.

3. 새로운 협력 모델 및 전략(5대 협력 시나리오 제시)

(1) 공급망 협력

- 전략물자 공동 대응, 식량·에너지 공동 비축·조달, 제3국 농업투자, LNG·수소·암모니아 공동 구매·투자.

(2) 첨단 제조업 협력

- 반도체, AI, 양자, 바이오, 항공우주 등에서 상호 보완적 가치사슬 구축과 기술·인재·표준 공동 개발.

(3) 탈탄소 인프라 협력

- 수소·암모니아·CCS 공급망 공동 구축, 재생에너지 공동 투자, 기술표준 공동개발.

(4) 청년 화이트칼라 노동시장 통합

- 단계별: 비자·제도 완화 → 학위·자격 상호인정 → 노동시장 연계 심화 → 단일 시장 구축.

(5) 자본시장 통합

- 금융상품 상호인정, 공동상장, 결제·청산 연동, 금융감독 공조, 최종적으로 완전 자유화 및 공동 금융상품 개발.

4. 첨단 제조업·탈탄소 협력의 한계와 우려

- 경제안보 규제·정치리스크로 협력 기반 불안정.
- 법·제도·규제 차이, 지적권 귀속문제 등 실무적 장애물 존재.

- 기술·표준 선점 경쟁과 공동 개발 간 이해충돌 가능.
- 막대한 초기투자·수익성 불확실성으로 지속성 확보 어려움.

※ 한일은 지정학·지경학 리스크 심화, 글로벌 거버넌스 재편, 첨단산업 패러다임 전환, 글로벌 사우스 부상 등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상호 보완적 협력 모델을 시급히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제도·규범·표준 통합과 상호 신뢰 구축, 단계적 통합 로드맵이 필수적



제4회 국회외교안보포럼 - 새 정부의 한일관계: 비전과 전략



토론 1



이성권 국민의힘 국회의원

한일 60주년, 미래의 한일관계

이성권 국민의힘 국회의원

1. 한일 양국의 지난 60년 관계

가. 정치 주역의 변화, 전전세대의 퇴장과 전후세대의 등장

- 한국은 일본과의 소통·교류의 가치를 알았고, 일본은 한국에 대한 미안함·배려심 가졌던 전전세대와 동 세대 정치인들의 퇴장
- 이후 자국 중심적인 사고 경향을 갖는 전후세대의 등장, 한국은 반일감정 조장 등으로 반사이익을 얻고, 일본은 험한 혹은 한국 때리기를 통해 이득을 보려는 각국의 전후세대 정치인들이 정치주도

나. 한일 양국,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의 변화

- 과거의 양국, 외교·경제 등에서 일본이 한국을 월등히 앞서는 수직적 관계
- 현재의 양국, 외교력·경제력·기술력·문화력 등 모든 면에서 수평적 관계
- 정치의 민주화, 합법적이고 주기적인 정권교체로 한국인은 정치의식이 높아졌고, 일본은 전후세대가 사회의 주역으로 등장함과 맞물려 패전국에서 정상국가로의 변화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 강조하는 경향 커짐

다. 민간 분야의 적극적인 교류와 한일 양국 국민의 상대를 향한 인식 변화

- 음악, 스포츠, 영화 등 K-컬처가 일본에서의 확산
- 한국, 일본 대중문화 수용
-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
- 문화적 교류를 통한 양국의 국민 간 교류 채널 다양화 및 친밀도 향상

라. 한일 양국 간 갈등-교착-화해-협력의 무한 반복

- 양국의 각 정권교체와 국내정치 상황이 한일 간 갈등과 협력의 반복 견인
- 과거사 문제, 양국 간 관계 악화와 회복의 핵심 변수
- 한일관계의 60년, 양국 간 관계를 지나치게 낙관하거나 혹은 비관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 형성

마. 지도자 1인의 결단만으로는 근본적인 관계 개선이 쉽지 않은 한일 양국

- 1998년 김대중 오부치 선언 이후에도 냉탕과 온탕을 오갔던 양국
-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강하게 충돌했던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총리
-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 스가 요시히데 총리 등과의 충돌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협력

2. 한국의 신정부 출범과 한일관계의 변수

가. 각 정권교체, 국내정치 상황 등에 따른 양국 관계의 변화

- 한국의 정권교체에 따른 대일기조 변화 여부(전 정부의 대일정책 중 성과분야 지속 유지 여부, 여대야소의 국내정치, 여당의 정치적 스탠스 등)
- 일본의 이시바 내각의 소수 여당이라는 정치적 기반의 불안정성
- 한일 양국 각자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정책적 스탠스

나. 글로벌 경제질서의 혼돈과 한일 양국 안보의 위협 요소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동맹국에 대한 비즈니스적 접근(관세, 방위비 등)
- 트럼프의 돌출형 정책결정 스타일이 한일 양국의 경제, 안보에 미칠 영향
- 미국과 중국, G2의 경제와 군사 패권전쟁
- 북한의 러우전쟁 파병 및 북러관계 밀착
- 핵, 미사일 등 북한의 지속적인 무기증강

3. 미래의 바라는 한일관계

가. 환갑에 들어선 한일 양국 관계

- 환갑, 많은 경험을 했다는 의미로 지난 시간에 대한 되돌아봄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려는 변곡점
- 한일 양국의 60주년, 환갑을 맞이한 만큼 양국 간 있었던 많은 일들을 경험과 교훈 삼아 향후 양국의 미래를 고민해야 함

나. 정치

- 양국의 정부보다 상대적으로 유연할 수 있는 양국 의원 간 외교 활성화를 통한 교류 강화
- 상대 국가의 정치적 문화와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위한 교류
- 양국 의회 사무국 직원 및 국회의원 보좌진 간의 교환 근무

다. 미래세대 간 교류

- 한일 양국의 미래세대는 새로운 한일관계 구축의 자양분으로 한일 양국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 원동력
- 절대 양속이었던 독일과 프랑스가 엘리제조약을 맺고 청소년 교류사업을 통해 양국의 미래세대 간 상호 이해도를 높였던 사례 벤치마킹 필요
- 한일 양국의 미래세대가 양국 간 역사, 문화, 경제 등 다양한 영역을 상호 이해할 수 있는 채널과 프로그램 마련

라. 경제

- 디지털 3.0세대에 맞춰 기술혁신의 중추인 스타트업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 강화와 공동 육성을 통해 공동의 경제운동장 조성 및 새로운 경제 성장동력 창출
- 창업교육, 인큐베이팅, 자금조달 등 스타트업 비즈니스 모델의 전 과정에서 한일 양국의 협력 방안 마련
-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양국 정부 등의 공공영역과 재계 등 민간영역에서의 펀드

조성, 공동 지원 및 육성 프로그램 개발

- 스타트업의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양국의 공동 교육프로그램 및 양국 노동시장 상호 진입과 양국의 동일한 상호 지원방안 모색
- 양국 정부 차원에서는 스타트업 관련 규제 이슈 발굴과 혁신을 통해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 확보
- 이 외 한미일 협조와 트럼프의 관세정책 등 각종 경제변수에 대한 공조

마. 안보·외교

- 트럼프의 방위비 등에 대한 공동 대응
- 북한의 핵과 미사일, 북러관계, 미중 간 패권경쟁 등에 대한 한일 공조
- 북한과의 군축협상(북핵 스몰딜) 등 트럼프의 변칙, 돌출형 행보에 대한 공동 대응
- 러우전쟁, 북한군 파병, 중동문제, 사이버공격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 한미일, 한중일 이외 다자외교를 위한 협력과 공동의 노력

바. 사회, 문화, 역사

- 한일 공통의 고민거리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 강구(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 지방분권 등)
- 음악, 영화, 예술, 체육, 관광 등의 분야에서 민간교류 활성화 혹은 우호 증진을 위한 제도 마련과 이를 통해 기저에 있는 양국 국민 간의 심리적 거부감(혐오감 등) 해소
- 과거사와 같은 한일 양국 간의 고착화된 갈등과 대립 요소에 대한 조정, 해결을 위한 노력

-이상 끝.



제4회 국회외교안보포럼 - 새 정부의 한일관계: 비전과 전략



토론 2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제4회 국회외교안보포럼 - 새 정부의 한일관계: 비전과 전략



토론 3

장세정 중앙일보 논설위원



제4회 국회외교안보포럼 - 새 정부의 한일관계: 비전과 전략



토론 4

길윤형 한겨레 논설위원

한일 관계의 네 번째 변동기

길윤형 한겨레 논설위원

세 분의 발제문을 잘 읽었습니다. 남기정 선생님께선 동아시아의 거시적 관점에서 지난 150년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며 새로 출범한 ‘포스트 1965년 체제’를 구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주셨습니다. 한-일 관계의 미래를 논하려면 크게 역사, 안보, 경제를 아우르는 세 갈래 접근을 해야 합니다.

남 선생님께선 역사 문제와 관련해 한-일 관계의 근본 문제인 ‘식민지배의 불법성’에 대한 양국의 해석을 통일시켜야 한다고 제언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된 지 60주년이 되는 2025년을 이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기점으로 삼아 3년 뒤인 2028년엔 새 한-일 공동선언을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한-일 양국은 식민지배의 불법성 문제를 ‘애초부터 불법·무효였다’(한국), ‘처음엔 합법이었지만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무효가 됐다’(일본)는 이견을 통일하지 않는 상태로 미봉했습니다. 또 “대한민국이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해석을 통해 북-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길을 닫았습니다.

남 선생님은 나아가 윤석열 정부의 지난 2023년 3월 ‘3자 변제안’에 대해선 ①2019년 문희상 법안+ α ②2015년 위안부 합의 때 합의된 후속 조치의 부활 ③일본 정부의 사죄 표명 등의 후속 조치를 통해 보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는 한-일 관계를 정상화시키려는 매우 원칙적인 접근으로 의견 자체에 대해선 매우 공감합니다. 하지만, 현실 외교적으로 이를 실현하기엔 적잖은 장애가 있다고 봅니다.

일본은 2015년 “미래 세대에게 사죄의 숙명을 계속 짊어지게 할 수 없다”는 아베 담화(전후 70주년 담화) 이후 역사 문제와 관련한 한국의 여러 요구에 냉담한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한국에서 ‘일방적 양보안’이라 할 수 있는 3자 변제안을 내놓은 뒤, 기시다 후미오 전 일본 총리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에 대해 “마음이 아프다”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전까지 일본 정부의 공식적 역사 인식은 무라야마 담화(1995) 때 공개되고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1998)에서 확인된 ‘지난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

해 사죄·반성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신은 안타깝게도 아베 담화에 의해 사실상 폐기됐습니다. “마음이 아프다”는 말은 히로히토 천황이 1990년 5월 방일한 노태우 전 대통령에 전한 “통석의 념”이란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일본의 반성적 역사 인식이 폐기된 상황에서 일본의 정상이 한국인 피해자들에게 뭔가 유감을 밝혀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은 결국 이렇게 개인의 감상을 말하는 것으로 축소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남 선생님의 의견은 크게 존중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이를 실제 달성해야 할 외교 목표로 내세우며 일본과 협상한다면 한-일 관계에 큰 긴장을 불러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양현 선생님의 발제문도 잘 읽었습니다. 조 선생님은 “국제 질서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공조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기본 전제 위에 서서, 과거사 문제를 우리가 잘 관리해 가야 하는 ‘돌발 변수’ 정도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조 선생님은 지난 6월 16일 나가시마 아키히사 총리 보좌관이 언급한 과거사 문제 관리를 위한 3원칙을 소개했습니다. 이는 ①단기적 이해득실에 얽매이지 말고, 양국의 장기적 전략 이익을 잊지 말 것 ②정부의 담화를 비롯한 과거 합의를 최대한 존중하고 결코 후퇴하지 말 것 ③양국 국민들을 용기를 가지고 설득해 나갈 것 등입니다. 이 원칙은 ‘3대 원칙’이긴 하지만, 조 선생님께서도 잘 아시듯 결국 방점은 ①에 찍혀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역사 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 국민들을 용기를 가지고 설득”하진 않을 것입니다.

조 선생님은 결국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포괄적 입법’ 등의 입법 조치를 통해 이 문제를 깔끔하게 매듭지은 뒤 한-일이 국익 극대화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읽힙니다. 한-일이 추진해야 할 협력 사안으로 ①한-일 2+2 신설 ②한국의 CPTPP 가입 ③공급망 협력 ④미국의 방위비/관세 압박에 대한 공동 대응 ⑤한-일, 한-미-일의 안보 협력 강화 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한-일은 결국 그런 방향으로 나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먼저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해 포괄적 입법 조치를 취하진 않을 것이라 봅니다.(대법 확정 판결을 받으신 피해자들 가운데 일부는 위자료를 받았고, 일부는 받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떻게든 대응하긴 해야 합니다)

이창민 선생님은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 등으로 인한 글로벌 패러다임의 변화를 지적하면서 한-일이 특히 경제 관계에서 새로운 협력 모델을 탐색해야 한다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①공급망 ②첨단 제조업 ④탈탄소 인프라 구축 ④한-일 청년 화이트 칼라

노동시장 통합 ⑤ 자본시장 통합 등 다섯 가지 분야에서 양국이 힘을 모을 수 있는 매우 구체적인 사업들을 열거해 주셨습니다. 각론에선 이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큰 틀의 문제 의식에 공감합니다.

돌이켜 보면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한-일 관계는 여러 굴곡을 거쳐왔습니다. 첫째는 냉전기입니다. 냉전의 거친 조건은 양국에게 협력을 강제했습니다. 남 선생님께서 지적하셨듯 두 나라는 역사 문제를 봉인하고 경제 협력의 길을 연, 이른바 1965년 청구권 협정을 통해 국교를 정상화했습니다. 그로 인해 한국 경제가 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마음 한편엔 민족의 울분을 제대로 풀지 못했다는 깊은 응어리가 남았습니다.

두 번째는 탈냉전기입니다. 1980년대 후반 냉전이 끝나며 ‘외부의 적’이 사라졌습니다. 이 놀라운 국제 환경의 변화 속에서 양국 관계는 크게 발전했습니다. 한국은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달성한 어엿한 중견국이 됐고, 일본도 평화헌법을 소중히 하고, 무라야마 담화(1995) 같은 반성적 역사 인식을 내놓을 수 있는 성숙한 국가 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양국은 1998년 10월 서로를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하는 한-일 파트너십 선언을 내놓게 됩니다. 양국의 대중문화가 상호 개방되며 일본에선 한류 붐이 불었습니다.

좋았던 옛 시절은 ‘신냉전’의 등장과 함께 막을 내렸습니다. 2010년대 들어 G-2로 성장한 중국이 동중국해·남중국해 등에서 일방적인 언행을 일삼으며 동아시아의 안보 환경이 급변한 것입니다. 일본은 이 위협에 맞서기 위해 미국과 동맹 강화에 나서는 한편,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을 한데 묶는 한·미·일 3각 동맹 구축을 시도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아베 담화’를 내어 “아이들에게 계속 사죄의 숙명을 지워선 안 된다”고 선언하게 됩니다. 역사는 그만 잊고, 북한·중국에 맞서 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제안을 그냥 받아들일 순 없었습니다. 두 나라는 2018~2019년 거세게 충돌했습니다. 한-일이 마지못해 악수라도 할 수 있게 된 것은 한국이 2023년 3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일방적 양보안’을 내놓은 뒤입니다. 이 ‘굴욕 외교’는 우리 마음속에 두 번째 응어리를 남겼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역사에서 안보까지 일본의 희망 사항은 모두 실현됐지만, 한국이 기대했던 ‘반쯤 찬 물컵’은 결국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한-일 관계가 네 번째 변동기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의 폭주로 한국, 아니 한-일의 번영을 가능하게 했던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는 사실상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일은 그동안 미국이 제공해온 자유무역질서와 또 미국과 맺은 양자 방위협정에 기대 지금의 번영을 이뤘습니다. 이 두 기둥이 동시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미, 한-일 간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들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핵심이 되는 일본에 대해 “so spoiled from having ripped us off for 30, 40 years”라고 했고, 한국에 미군을 배치하는 것에 대해 “tremendous loss”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시바 총리는 9일 선거 연설에서 “なめられてたまるか”(이렇게 무시당하고 참지만은 않겠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철강(50%)·자동차(25%)·반도체(예정) 품목 관세는 철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대비해야 하는 것은 앞으로 30~50여 년은 이어질 것이라 예측해왔던 미·중의 전략 경쟁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미국이 패권국의 책무를 견어차고 지금처럼 이기적인 횡포를 이어간다면, 불과 몇 년 안에 그동안 인류가 만들어온 모든 가치와 국제 규범이 사라진 ‘약육강식의 시대’가 도래할지 모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됐을 때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은 좋은 싫든 서로에게 소중한 비빌 언덕이 됩니다.

옛 갑신정변의 주역이던 서재필은 ‘회고 갑신정변’이란 기록에서 김옥균(1851~1894)이 입에 담았다는 비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늘 우리에게 말하기를, 일본이 동방의 영국 노릇을 하려 하니, 우리는 우리나라를 아시아의 프랑스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지금은 한-일이 협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두 나라 앞에 닥친 과제는 북·중 대응이 아니라 미국 대응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을 것은 참고 견딜 것은 견디며 협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한-일 양국 모두에서 서로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협력의 필요성은 이른바 ‘전문가’들보다 먼저 양국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제4회 국회외교안보포럼 - 새 정부의 한일관계: 비전과 전략



토론 5



강철구 배재대학교 교수

한일 경제관계, 새로운 협력 모델의 탐색

강철구 배재대학교 교수

1. 도입

이창민 교수의 발제문은 한일 경제관계의 새로운 협력 모델과 관련하여 지금 시점에서 왜 필요한지, 협력했을 때의 구조적 한계점은 무엇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협력할 경우 어떠한 모델과 전략을 중점으로 해야 할지에 대해 5개의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학문적·실용적 완성도가 뛰어난 본 발제문을 토대로 토론문에서는 몇 가지 추가 제안과 질의를 하고자 한다.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를 기점으로 지난 60년을 뒤돌아보면 한국의 경제성장 뒤에는 일본이 외부경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한국의 수출 주도형 고도경제성장 과정에서 일본으로부터 평균 중간재 60~70%, 자본재 20~25%를 수입했지만, 소비재는 5% 전후에 불과했을 정도로 일본의 영향력이 컸다. 그러나 이창민 교수도 언급하였듯, 2010년대 중반부터 경제적인 측면만 한정해 본다면 한일 간 비대칭적 상호 의존관계는 점차 악화되면서 대등한 파트너십의 관계로 서서히 정착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한일 간 경제협력이 과거에는 효율성에 기반하여 작동해 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안정된 공급망을 강화할 수 있는 상호 시너지효과에 기반하는 방향으로 외부경제로서의 역할을 통한 긍정적 효과가 커져가고 있고, 또 그렇게 수렴되는 것이 미중기술패권 시대에 일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지만 한일 간 경제관계에서는 언제나 리스크가 따라 다닌다. 그것이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아니면 국민감정이라는 역사적 배경이든, 긍정적으로 평가받던 외부효과나 파트너십, 경제협력 등은 대립관계로 바뀔 수 있다. 대표적으로 2019년 7월 일본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3품목 수출규제가 그렇다. 또 다른 리스크도 한일 경제협력을 방해한다. 2023년 3월, 말 많았던 ‘제3자변제안’이라는 해법으로 한일 관계가 공식적

으로는 갈등 관계에서 벗어나면서 경제협력도 순탄할 듯 보였지만, 중국의 발 빠른 공급망 재편과 트럼프 행정부 2기를 맞은 미국의 패권주의와 관세공격으로 한일 양국 모두 공급망 재편에 압박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배경을 의식한다면 이창민 교수가 제안한 5개의 시나리오는 향후 한일경제협력의 새로운 모델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2. 본론 - 한일 경제협력의 새로운 모델과 전략에 대해서

이창민 교수가 제시한 한일 간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고민하기 전에, 한 가지 전제를 해 보자. 만일 한일 간 경제협력이 아닌 '경쟁'이 격화된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그에 따른 열매는 중국이 가져갈 것이고, 반대로 한일 간 경제협력이 강화된다면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관세공격 및 무역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도 있다. 그렇다면 결론은 상호 윈윈(win-win)이 가능한 경제협력이 답이다. 다행히도 한일 양국은 근접한 지리적 이점과 문화적 동질성, 활발한 인적왕래 등 다양한 측면에서 협력할 동인(動因)이 많아 시너지효과가 발현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 놓았다. 특히 ABC(Auto, Bio, Chip) 등의 제조업 및 4차산업혁명과 관련한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준비된 나라는 OECD 국가 중 아마도 한국과 일본뿐일 것이다. 만일 양국이 글로벌공급망(GSC)에서 상호 협력관계를 긴밀히 할 경우, 과장된 표현일 수는 있으나 양국의 경제 및 산업에 양의 파급효과는 물론이고 글로벌 사회에서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는 열쇠를 가졌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창민 교수가 제시한 5개의 모델과 시나리오를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한일 간 지속가능(Sustainability)한 경제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토론자로서 이와는 별개의 추가 협력 모델을 두 가지 정도 제안하고자 한다.

1) 한일 간 먹사니즘의 경제협력

이창민 교수가 제안한 식량 공급망 협력은 좋은 사례이다. 의식주 중에서 의(衣)와 주(住)는 어떻게든 자국 내에서 해결 가능하지만, 기후변화와 산업 발전으로 인한 도시로의 인구집중, 식량주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쌀수입쿼터제를 운영하고 있는 환경, 국토의 70% 전후가 산지인 한일 양국은 식(食) 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당장 일본

은 최근의 쌀 파동으로 일본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쿼터제 이상의 쌀 수입 개방에는 부정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시바(石破茂) 총리는 7월 1일, ‘쌀안정공급실현관계 각료회의’「米の安定供給等実現関係閣僚会議」에서 2026년부터 쌀증산정책을 전환하겠다고 했지만, 농촌의 지방소멸과 고령화, 토지면적 증산 등이 쉽지 않다. 왜냐면 식(食)은 기본적으로 재화나 서비스의 증산과 디폴트값(default value)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일 통화 스왑처럼 양국의 식량안보를 위해 ‘1차 농산물 스왑’(Food swap), 또는 ‘비상식량 공동비축협약’ 등을 구축한다면, 기후위기 시대, 그리고 식량안보 차원에서 협력의 모범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2) 한일 간 동병상련의 현실 모델 구축

이창민 교수는 한일 간 DX, GX, BX 등을 연계하여 표준체계를 구축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이를 통해 한일 양국이 경제협력의 물꼬를 트게 된다면 다양한 분야에서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일본이 추진하는 DX, GX 정책에 한국기업과 고급 인재들의 참여 기회가 늘어날 것이며, BX를 연계할 경우 세계 표준체계를 구축할 수도 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 제안을 해 보자. 현재 한일 양국이 동병상련을 겪고 있는 두 가지 분야에서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다. ‘저출산고령화해결모델’과 ‘지방소멸대책모델’이 그것이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저출산고령화해결모델’은 선진국이 겪고 있거나 혹은 겪을 사회적 이슈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지방소멸대책모델’은 향후 개도국이나 또는 중진국에서 대두되고 있는 대도시일극집중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즈니스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3. 제안 및 질의

1) 양국의 문제해결을 위한 컨트롤타워 설립

한일 양국 모두 기업들은 필요에 따라 협력관계를 맺는다. 문제는 양국의 규제와 법률, 표준이 다른 점이 걸림돌이 된다. 따라서 여분의 시간을 소비하지 않도록 문제 해결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서비스기관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국가 간 경제협력이 레토릭(Rhetoric)에 멈추지 않기 위해서는 힘의 작동이 아닌 제도의 논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 + 일본의 경제산업성(経済

産業省), 또는 한경협(韓經協) + 케이단련(經團連)에서 공동기관을 설립하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도 있다. 한일 양국의 경제협력 컨트롤타워를 설립하는 것, 예를 들어 유럽 통합의 기초가 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처럼, 청와대에 일본경제특보관, 일본 총리관저에 한국경제특별서기관 등을 두어 서틀외교처럼 수시로 만나서 양국의 경제협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없애나가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그럴 경우 궁극적으로 협력을 통한 양국의 경제적 시너지효과 뿐만 아니라, 정치적, 외교적 문제까지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한다(이는 서울대학교 김현철 교수의 평소 지론(持論)으로, 본인의 허락 없이 토론문에 소개하였습니다).

2) 한일 갈등의 구조적 문제 관리

스페인의 마드리드콤플르텐세대학(Universidad Complutense de Madrid, UCM) 경제경영학부 앞에 ‘경제학은 곡선이 아니라 사람들에 관한 학문이다’라는 간판이 있다고 한다. 경제학이 사람이 결정하는 선택에 관한 학문이란 의미로 해석한다면, 특히 한일 간에는 이 명제를 기억해야 한다.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는 수요공급‘곡선’의 문제가 아니라 양국 국민감정과 지도자들의 의사결정의 결과였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것을 이때 우리는 절실히 체감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한일 양국은 리더십과 국민감정에 의해 시장이 통제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향후에도 이런 일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없다고 장담할 수 없는 것이, 때때로 한일 양국 간에는 민간기업을 국민경제와 동일시할 때가 있기 때문이다. 2019년 수출규제 당시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일본의 민간기업이 지불해야 할 배상을 아베 정부가 막았고, 우리 역시 일본에서 네이버의 라인야후(Line Yahoo)가 정보유출로 총무성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일개 민간기업을 국민기업으로 인식하는 현상을 보였던 적이 있다.

따라서 한일 경제협력을 논하는 지금 시점에서 정치적 사안이나 국민감정으로 경제의 발목이 잡히지 않도록 불가역적인 장치(irreversible safeguard)를 마련해 놓는 것은 어떨까? 그것이 제도이든, 법률이든, 아니면 협약이든....

3) 경제협력의 열매를 어떻게 분배할까의 고안(考案)

한일 경제협력은 수학적 공리(axiom)를 논할 필요도 없이 곧바로 정리(theorem)로 넘어갈 수 있는 경우이다. 다만 경제협력의 합이 어느 한 국가가 일방적으로 유리하지 않아야 지속가능할 것이다. 이창민 교수는 반도체산업의 경우 공동 테스트베드 공유 및 표준화 협력, 그리고 한일 공동 반도체 혁신 연구센터 설립 등을 제안하였는데, 이럴 경우 일본이 더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것이다. 증명된 바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기초 과학은 R&D를 얼마나 많이 투입하느냐와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다.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 지급과 민간 기업의 자본이 투입되는 일본과 그렇지 않은, 또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한국과의 경제협력 모델은 시간이 흐를수록 종속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고안(考案)은 있을까?

4. 토론 마무리

한일 간 경제협력은 국익을 증진하기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계기로 한일 FTA 협상이 중단되고, 2018년 대법원 판결 결과로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가 가동되면서 한일 간에 암묵적으로 이어져 왔던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는 두 트랙 접근이 무력화되었다. 이를 다시 복원시킬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한일 간 경제협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 그래야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호혜적 관계를 바탕으로, 또한 상호 보완적인 분업관계가 이루어지면서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제4회 국회외교안보포럼
Korean Consensus

새 정부의 한일관계: 비전과 전략